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50대, 이제는 청년이다!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SBS와 맥킨지가 공동으로 작업한 미래한국리포트, “고령화 충격-활로는 없는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미래한국리포트는 세계 최단기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한국의 미래와 당면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고령화의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인구지진과 2026년 한국, - 하나가 벌어 하나를 부양

2. 늪어가는 한국, 삶이 고달프다

3. 한국경제와 고령화의 덫

4. 해법은 알고 있다. 실천이 문제다

5. 신 국부창출,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오늘 발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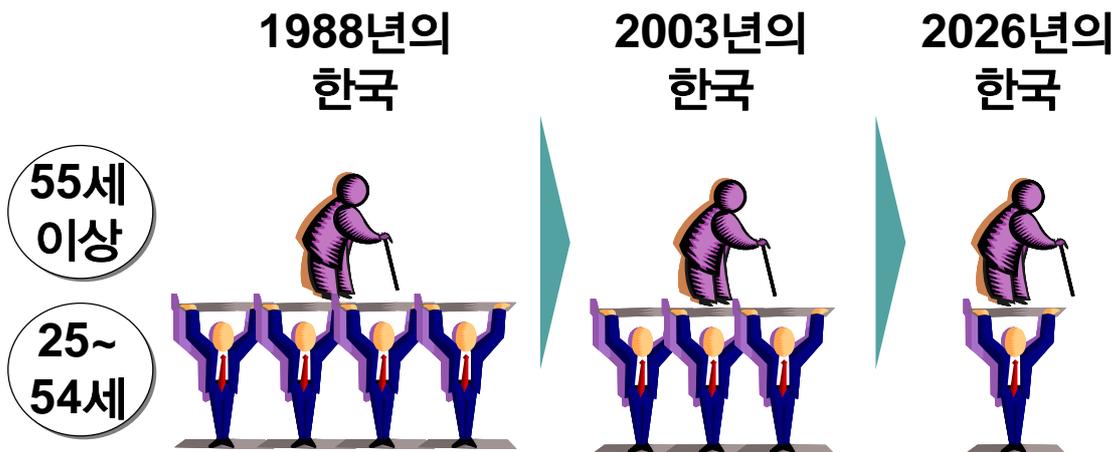
이어서 고령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고령화의 도전을 분석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분야별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령화 충격의 활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국부창출 프로그램과 생산성 혁명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명이 벌어서 1명을 부양



젊은 층, 허리가 휨다

2026년 한국의 미래부터 보시겠습니다.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의 한국.

1명이 벌어서 1명을 부양하는 허리가 휘는 삶이 현실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25세에서 54세의 일하는 사람 3명이 55세 이상의 노년층 1명을 부양하는 지금과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25세를 넘겨 취업을 해서 50대 후반 혹은 그 이전에 퇴직을 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여성취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노인에게 대한 부양부담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SBS와 맥킨지의 분석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생산층과 비생산층의 정의에 따라 노인부양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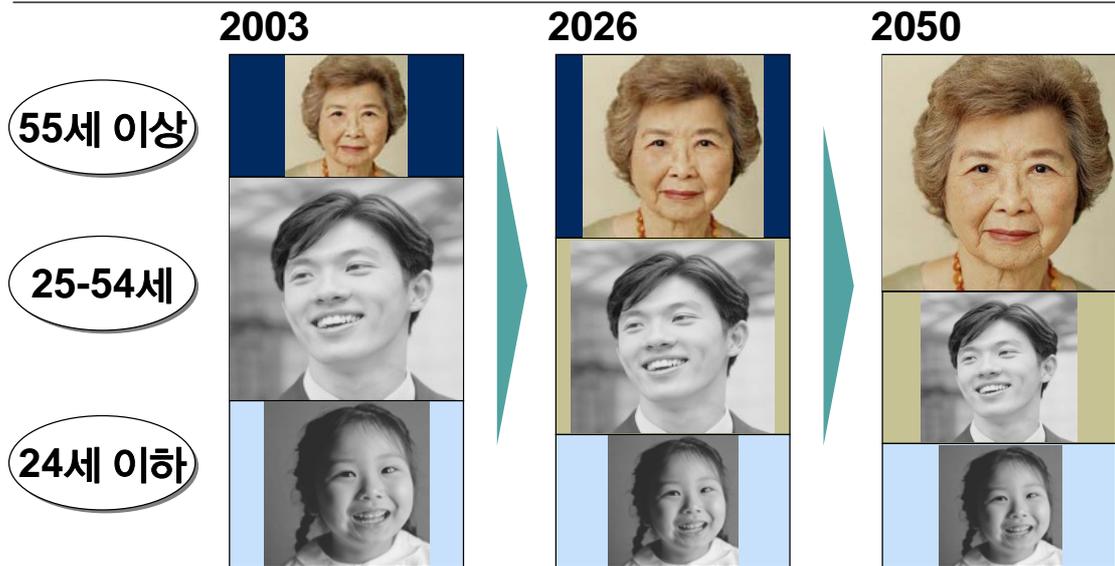
보통의 노인부양비율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로 계산하며,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라서 여러 나이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예, US Census의 경우는 20~64세와 65세 이상으로 분류)

본 분석에서는 통계상의 개념보다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25세~54세, 55세 이상으로 분류하며 분석한 결과임

인구구성변화에 대한 예상치는 출산율 가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여러 추계가 존재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2001년 발표를 참조하였음

2050년의 한국, 노인들의 사회

한국인구 구성



5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계청은 2003년 17%였던 55세 이상 인구가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3분의 1,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반에 달하는 2천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25~54세 인구는 현재 인구의 반에서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전된 피라미드와 노인들의 리그. 인구의 대지각변동, Agequake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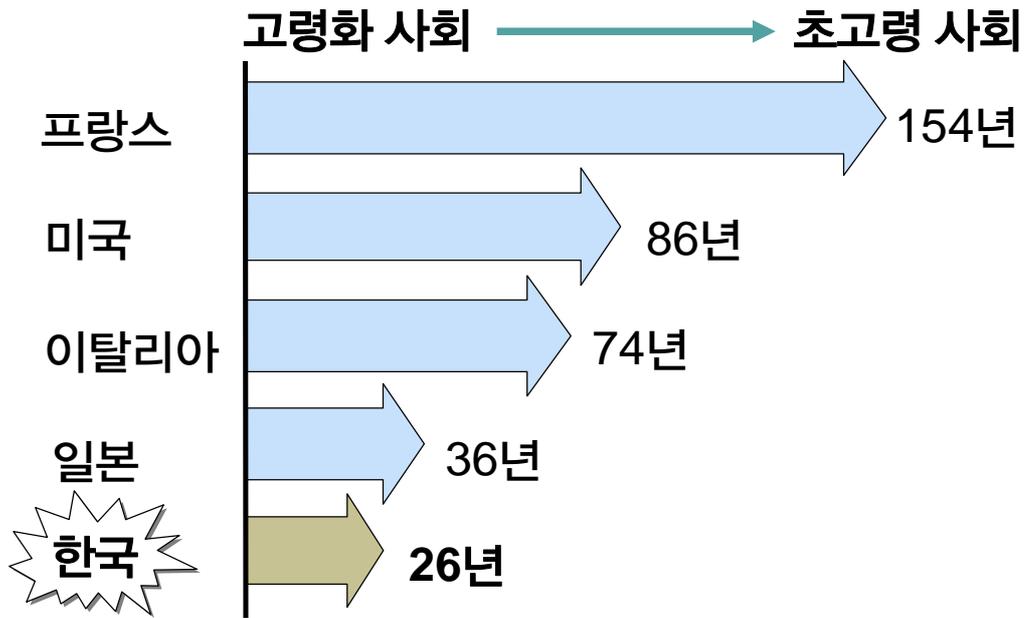
24세 이하, 25~54세, 55세 이상 인구 비율

2003: 35%, 48%, 17%

2026: 23%, 42%, 36%

2050: 19%, 33%, 48%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나라가 역사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20%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에 프랑스가 백오십년이 넘게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26년이 예상됩니다. 일본보다도 10년이 빠른 속도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

프랑스: 115년, 39년(예상)

미국: 69년(예상), 17년(예상)

이탈리아: 52년, 22년(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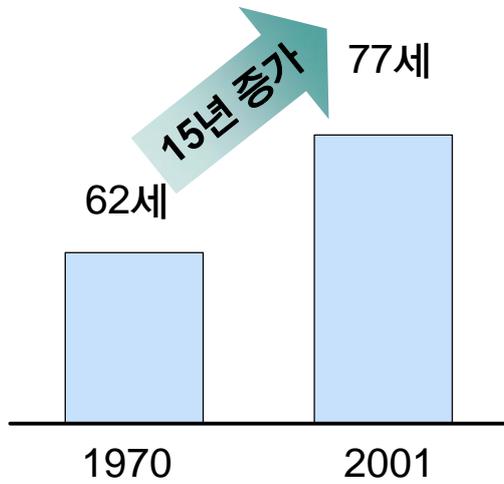
일본: 26년, 10년(예상)

한국: 19년(예상), 7년(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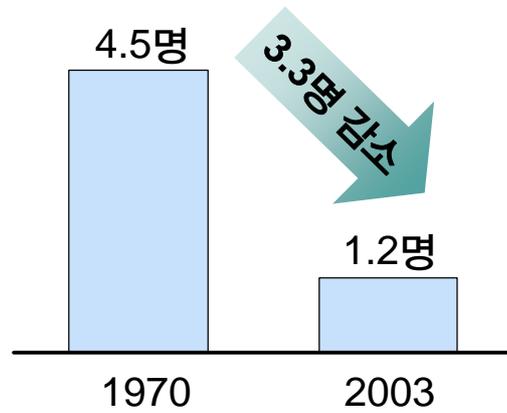
한국의 경우 2001년 통계청 추계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토대로 이보다 더 짧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존재함

원인은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급락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하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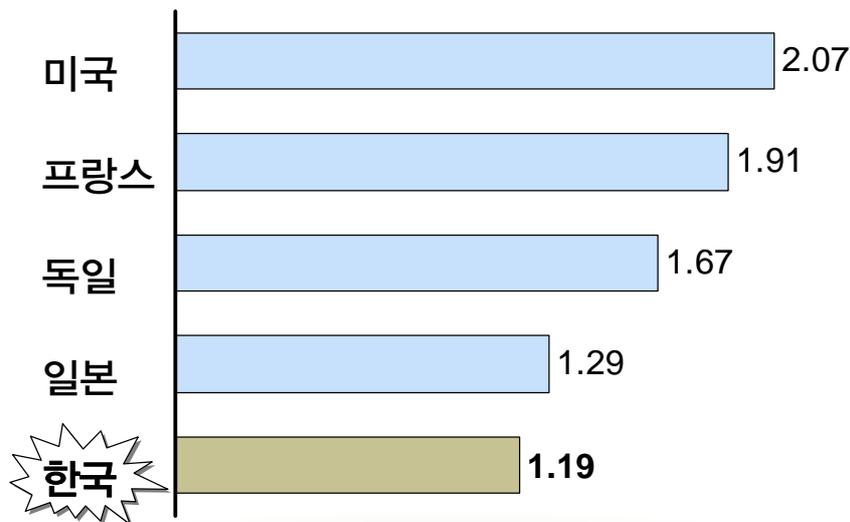
고령화의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균수명은 급속히 증가하고 출산율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수명은 15년이 늘어났고 출산율은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 자료상세설명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임

고령화의 결정적 원인은 출산율 급락

출산율 비교 2003 (명)



세계 200여개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한국

무엇보다 세계최저의 출산율이 근본 원인입니다. 고령화의 결정적 요인은 인구 대체출산율, 즉 인구의 현행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을 한참 밑도는 1.1 명대의 출산율입니다. 전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일부 동구권국가를 제외하고는 최저입니다.

이대로 가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2026년의 한국. 미래로부터 편지가 와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 자료상세설명

UN 가입국이 191개국으로써, UN에 가입되지 않은 몇몇 국가를 감안할 경우 통상 세계 국가는 200여개국임

한국은 체코(1.17, 2002년), 슬로바키아(1.19, 2002년)와 함께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임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임

미래에서 온 편지 (Letter from the Future)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화라고 합니다. 제 편지 받고 많이 놀라셨죠? 지금 여기는 2026년 9월 15일. 미래한국리포트를 발표하는 그 쪽보다 정확히 22년 뒤니까요. 굉장히 먼 미래 같겠지만 살아보니 금방이더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깜짝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 계신 분들께 꼭 전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는 마흔 여섯.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왔지만 1년이 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24살이 끝나 가던 2004년 말 어렵게 취직을 했지요. 그래도 저는 참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집을 갔거나 지금도 백수 노처녀로 지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무엇보다 50살의 나이로 직장을 잃으신 뒤 번듯한 일을 찾지 못하고 계신 아빠께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28살 되던 2008년 직장동료와 결혼을 했지요. 아이문제는 역시 쉽지 않더군요. 직장생활 때문이죠. 결국 미루고 미루다 결국 31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엄두도 두지 말자고 이름도 '하나'로 지었답니다. 어쨌든 빠듯해도 남편과 저는 열심히 살면서 집도 마련했어요. 물론 지금도 30년짜리 모기지론을 갚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만하면 운이 좋은 셈이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어제 친정 식구들과 모처럼 저녁식사를 했어요. 아빠의 73번째 생신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흔이 넘은 할머니는 치매로, 제 동생은 미국으로 시집갔고 남편은 해외 근무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요.

지금도 놀랍도록 정정한 아빠는 식사 도중 침울한 표정으로 "영화야 내가 정말 이렇게 20년 넘게 놀 줄은 몰랐다. 미안하구나" 하시더군요. 제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조금이라도 더 보태 드리고 싶지만 시댁도 돌봐야 하고 제 자신이 허리가 휠 정도거든요. 저녁 값 계산하며 돈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 불효녀죠?

여기 생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으로 제 월급의 40% 이상이 손끝하나 거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교육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바람에 대학도 여기저기 많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우리 아들 하나는 중국회사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과외 한번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부터 또 데모군요. 군인, 교사, 공무원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연금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20년쯤 뒤면 위험하다는데 제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지금. 한 사람이 벌여 한 사람을 부양하는 시대라는데 체감은 더 심해요. 가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구요. 경제는... 얘기할 기분이 들질 않네요. 다만 열심히 일해도 점점 불안하고 가난해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전해 드릴게요.

갑자기 동생생각이 나서 조금 전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목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오며 이렇게 물었어요. "나 정말 뭐 잘못된 거니?"

여러분, 고영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주세요. 그랬다면 이런 편지는 받지 않았겠지요.

자, 힘내세요. 2004년 9월 15일.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인구지진과 2026년 한국,
- 하나가 벌어 하나를 부양

2. 늪어가는 한국, 삶이 고달프다

3. 한국경제와 고령화의 덫

4. 해법은 알고 있다. 실천이 문제다

5. 신 국부창출,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어떠십니까. 물론 고영화씨는 고령화 시대를 설정한 가공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 이러한 미래가, 혹은 더 우울하고 고달픈 미래가 오지 않으리라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1



노인취업

2



**국민연금
고갈 위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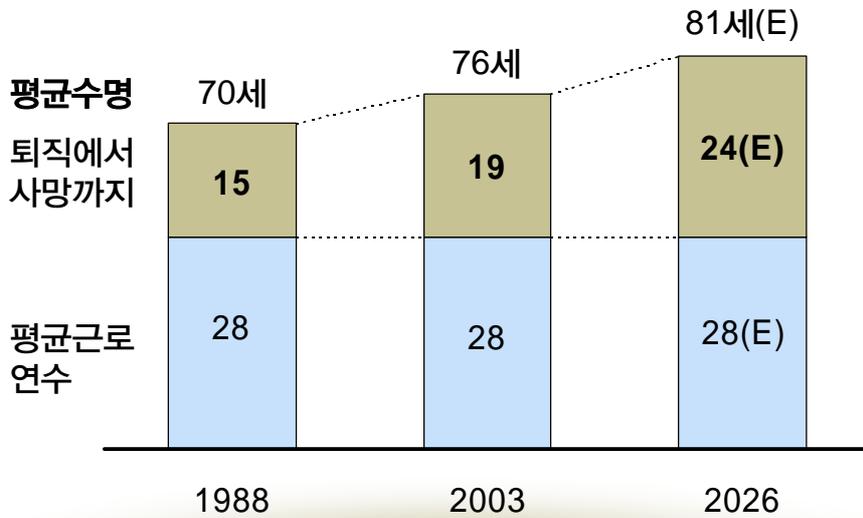
**노인의료
시스템 취약**

그러면, 고령화 충격의 실상을 노인취업문제, 국민연금 문제, 의료 문제 등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를 통해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취업 문제입니다.

1 퇴직 후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한국인의 평균 정년과 수명의 변화 (년)



30년 벌어 25년 버텨야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연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88년에는 30년 가까이 벌어서 15년의 퇴직 생활을 지탱하였으나, 지금은 비슷한 기간 동안 준비해서 20년을, 2025년에는 25년의 여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조기퇴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긴 노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평균취업연령, 평균퇴직연령에 대한 가정

1988년: 27세(가정), 55.2세

2003년: 28.8세, 57세

2025년: 29세(가정), 57세(가정)

1988년: 평균취업연령은 대졸남성의 경우 2년 반의 군복무를 가정할 경우 27세 정도에 취직을 하게 됨을 고려한 가정치임

평균퇴직연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1988년 수치임

2003년: 평균취업연령은 잡링크에서 조사된 대졸자의 평균취업연령임

평균퇴직연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2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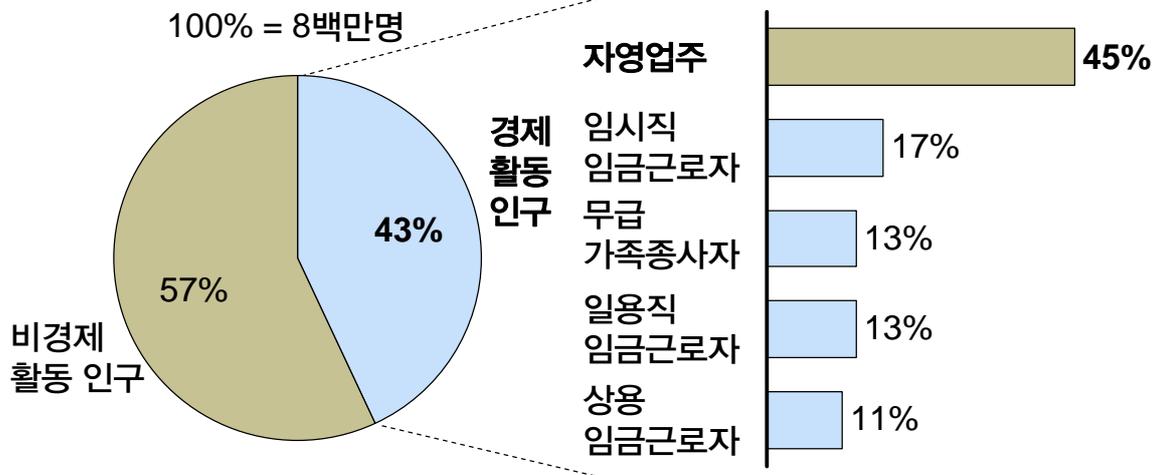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해 체감 퇴직연령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2026년: 평균취업연령과 퇴직연령이 2003년과 같다고 가정할 때임

2026년의 예상평균수명은 2025년의 예측치 사용

1 현재의 55세 이상 60%가 무직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



당신의 미래도 무직 아니면 자영업?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60% 가까이가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이나 단순노무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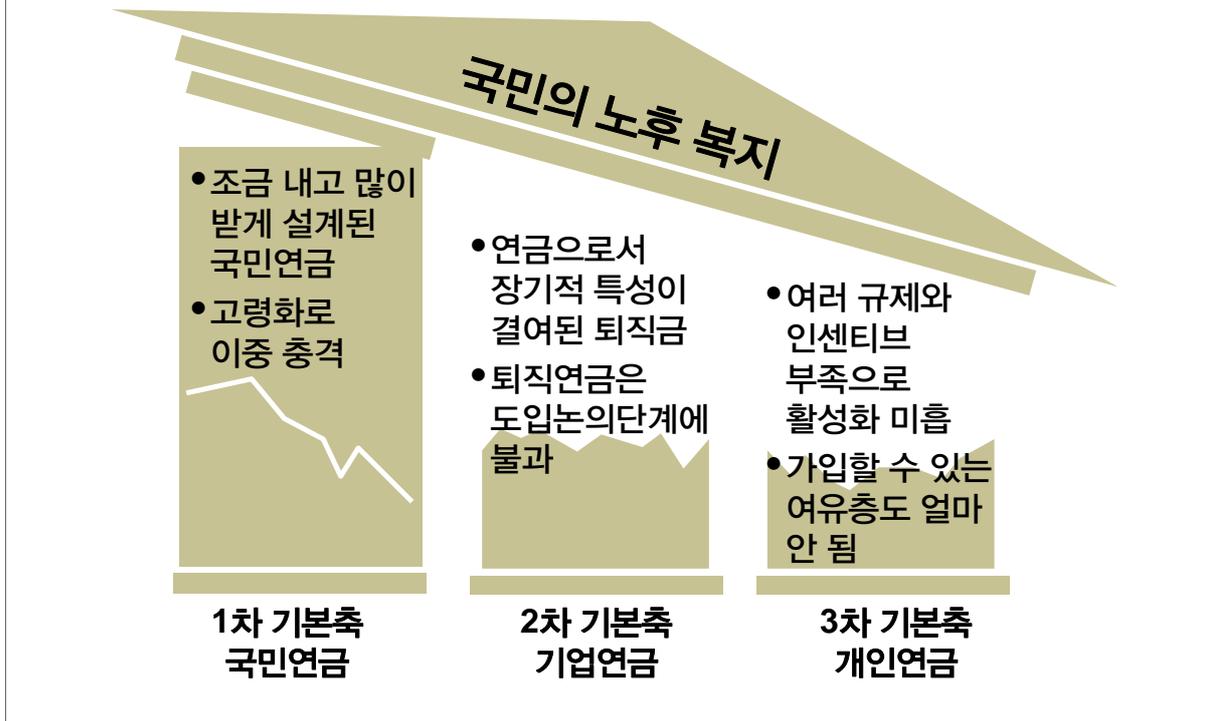
운 좋게 30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았다고 해도 25년을 일없이 버텨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자영업주는 자영자와 고용주를 더한 수치임

자영업주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2 어느 하나도 안정적이지 못한 한국의 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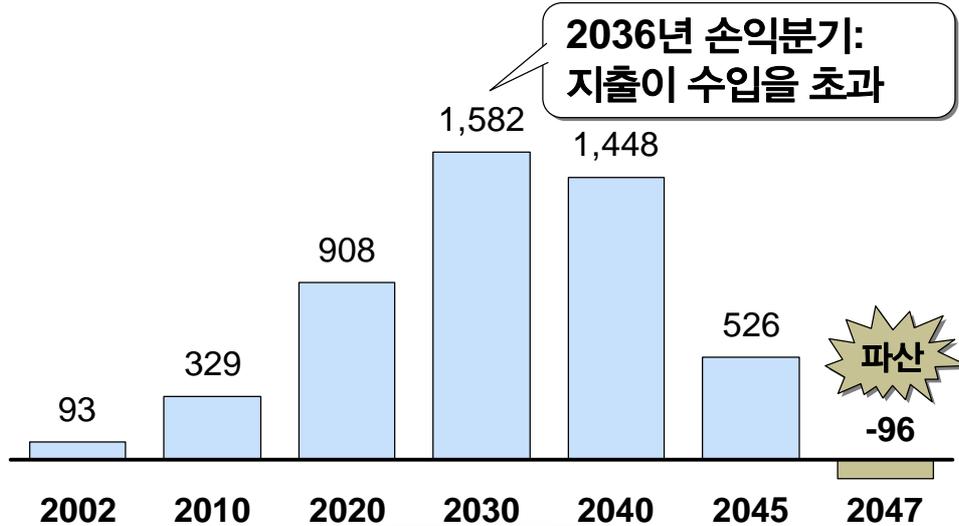
고령화가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가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그랬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굳이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연금제도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옆친 데 덮친 격입니다.

연금의 3대 기본축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모두가 문제입니다.

2 국민연금 2036년 적자돌입, 2047년 고갈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나리오 -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전망
조원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36년 적자돌입, 2047년 고갈됩니다. 정부도 인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빚어낸 차가운 현실입니다.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고령화 충격에 직면한다면 국민연금은 파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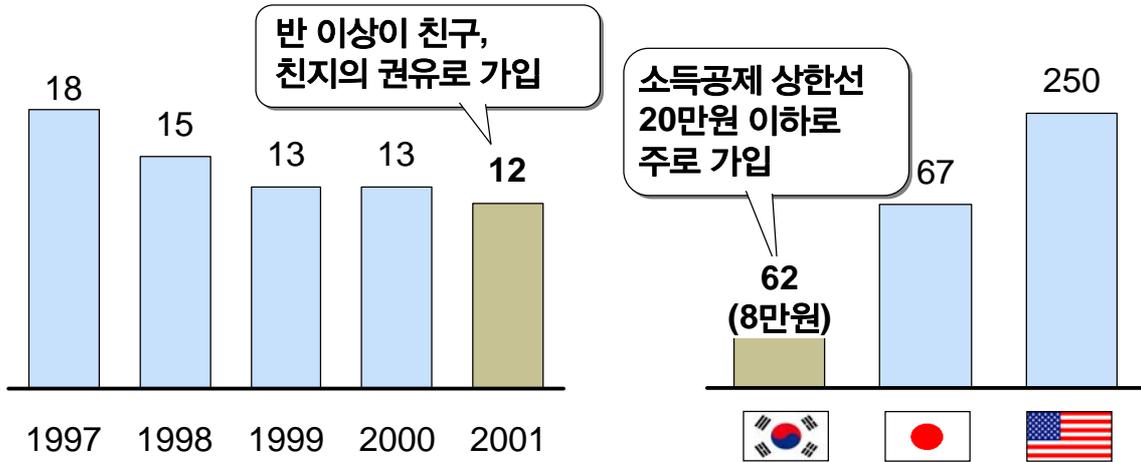
◆ 자료상세설명

현행과 같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때의 기금 전망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따라 고갈이 늦추어질 수 있음

2 개인연금 제구실 못한다

개인연금 가입률 (%)

월 납입료 (달러)



노후 보장보다는 소득공제가 주된 가입 목적

기업연금의 경우 이제 막 도입이 논의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노후보장의 성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은 정부가 2006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50달러를 가입하지만 한국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노후대비보다는 소득공제, 즉 절세와 같은 여타 목적에 의한 가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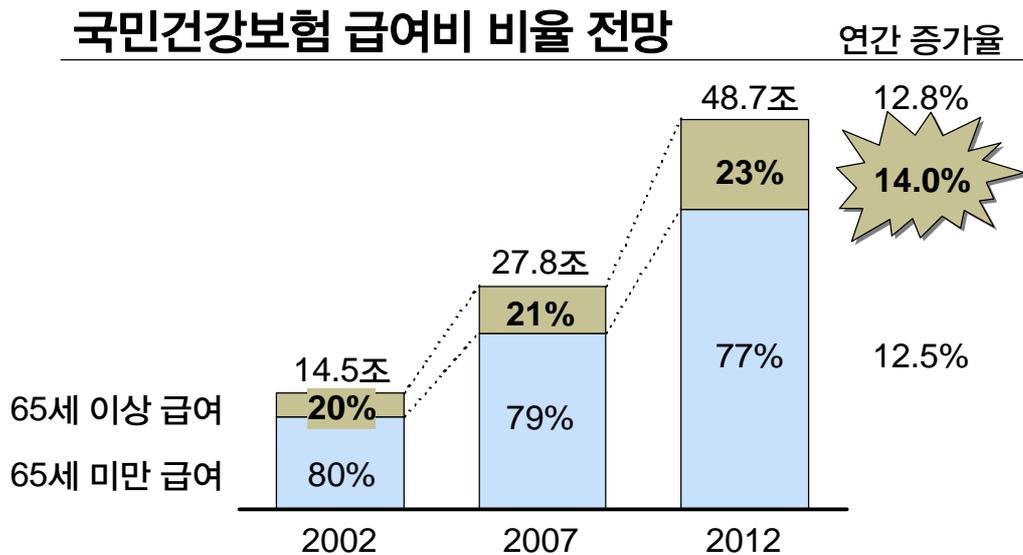
개인연금 가입률: 전체 가입건수를 2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임

월납입료: 연간 납입료를 계약건수로 나눈 수치임, 즉 하나의 계약당 납입료 실적임
한국은 2001년, 일본은 2002년, 미국은 2003년 자료임

가입이유: 금융감독원이 2000년 직원 674명을 개인연금의 가입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연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절실”)에서 응답자 중 52%가 친구, 친지의 권유로 개인연금을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보험사의 권유가 19%, 자발적 가입은 29%에 그쳤음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84%가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의 수령액을 점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사실상 개인연금을 노후대비 성격으로 가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3 10%의 노인이 건강보험 급여의 1/4 차지



장기 요양 (중풍, 치매)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

돈 없고 일 없는 노인들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문제가 질병입니다. 우리의 노인의료시스템은 어떨까요.

2002년 현재 전체인구의 8%에 불과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10%인 노인이 건강보험급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인구 1인당 필요로 하는 의료 재정과 시설, 서비스는 비고령인구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건강보험 급여에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중풍, 치매 등과 관련된 장기요양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자료상세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과 같은 재정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OECD 수준의 급여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가정하여 총 급여를 추정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급여는 고령인구 증가분에 비례하여 추정하였음.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 중에서도 초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의료 자원 소비가 더 큰 규모임을 감안할 때 실제 고령인구 급여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중산층 노인 아프면 가족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저소득층

-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해결
- 무료/실비 요양시설, 방문 복지 제도 이용

고소득층

- 자가 부담으로 해결
- 월 150-250만원으로 유료 요양시설 및 간병인 이용

중산층

- 가족말고는 갈 곳이 없어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절반을 가족이 수발

노인의 질병을 누가 맡을 것인가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부족하긴 하지만 무료, 실비 요양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고소득층은 월 150-2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의 경우에는 가족 수발만이 유일한 길일 뿐 갈 곳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절반을 가족이 수발하는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정의 황폐화, 더 나아가 가정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 충격,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소득 1만달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고령화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 자료상세설명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정의하였음. 무료, 실비 이용시설은 현재 생활보장 대상 또는 최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함

무료요양/전문요양 시설 전국 181개소, 정원 14,213명

실비요양시설 평균 월 이용금액 30만원 (전국 19개소, 정원 1,851명)

유료요양/전문요양시설 평균 월 이용금액 100~250만원 (전국 32개소, 정원 1,554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용역 결과, 2001 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수발은 51%가 가족, 26%가 비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며 23%의 노인은 비수발 상태임

1. 인구지진과 2026년 한국,
- 하나가 벌어 하나를 부양

2. 늙어가는 한국, 삶이 고달프다

3. 한국경제와 고령화의 덫

4. 해법은 알고 있다. 실천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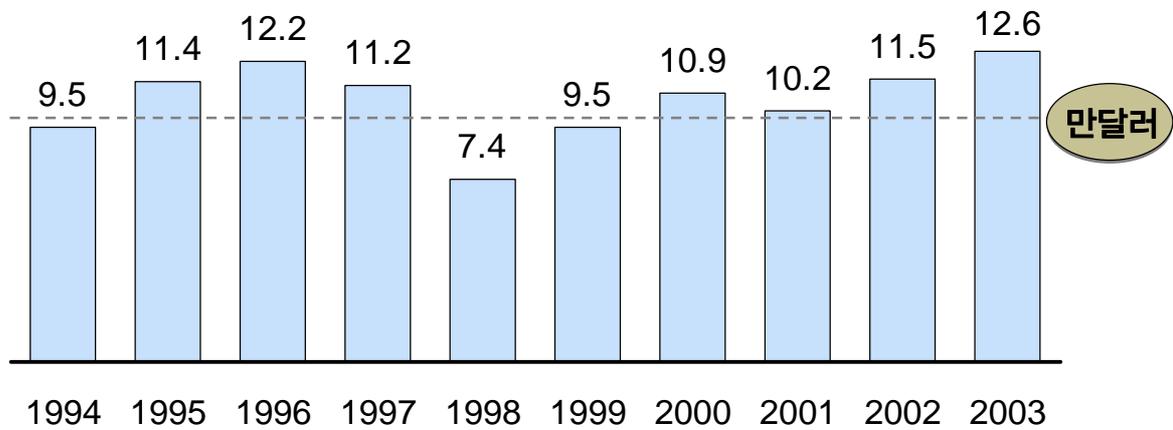
5. 신 국부창출,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령화는 개인의 삶과 사회 안전망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도 대단히 큼니다.



한국의 잃어버린 10년, 10,000 달러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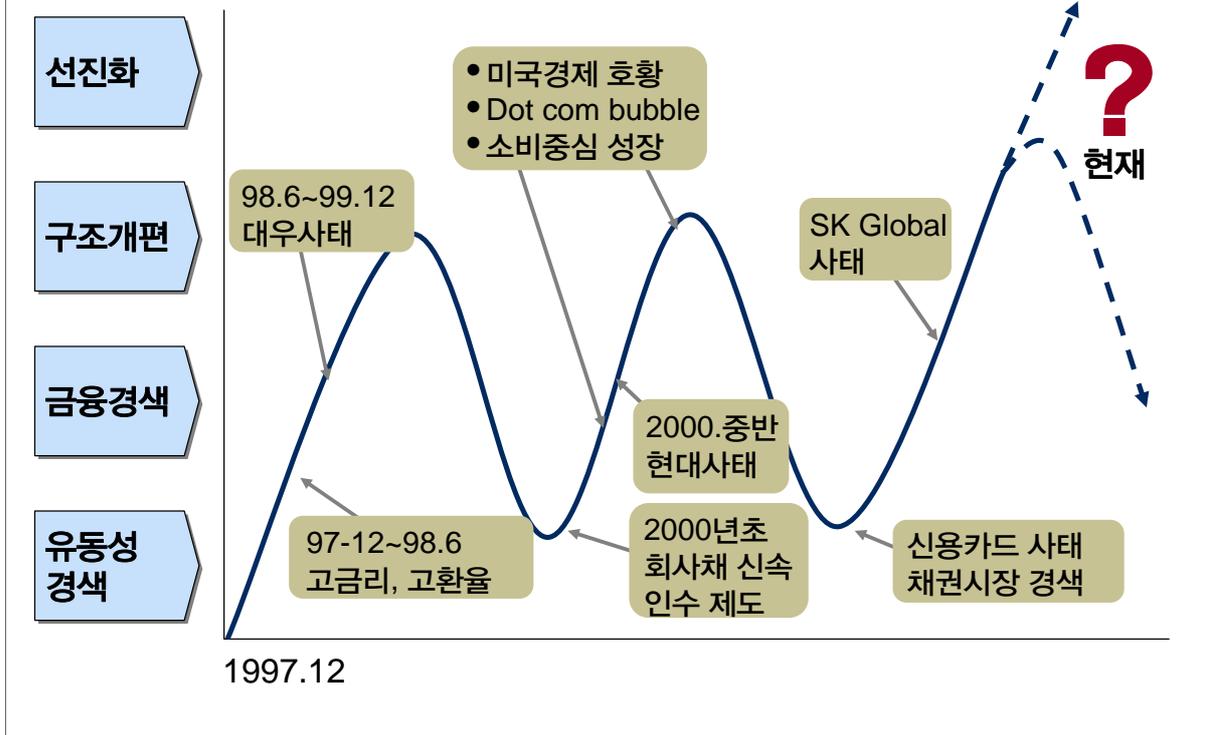
1인당 GDP - 명목 (천달러)



과거 10년은 10,000 달러에서 발전이 정체

10년 전 성장 가도를 달리던 한국의 1인당 GDP 증가는 1997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200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1996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10년 가까이 소득 1만 달러 근처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복되는 선진국 진입의 좌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는 선진화를 위한 일보 전진과 유동성 경색, 금융경색 등 일련의 사태로 일보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진국으로서 고령사회 진입, 준비할 여유가 없다

고령 사회 진입 당시 1인당 국민소득 순위비교

국가	진입 당시 순위	진입 연도
 일본	2위	1994
 독일	10위	1972
 프랑스	11위	1979
 한국	20위권	2019 (E)

치열한 경제경쟁 속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중진국으로서는 드물게 고령화 충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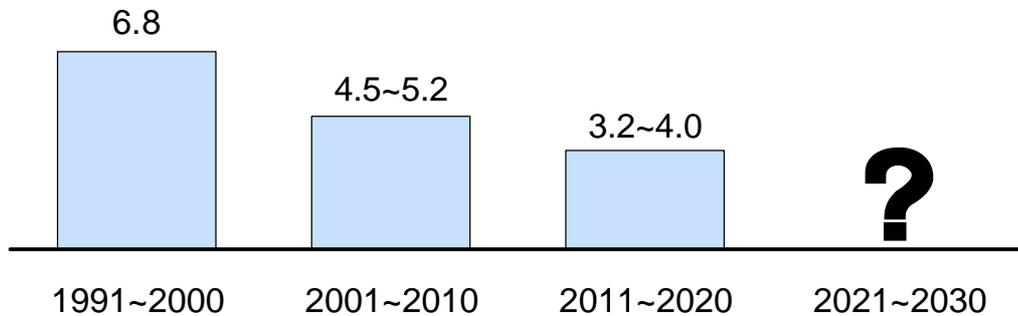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고령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도 선진국으로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에게겐 충격을 흡수할 경제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한국경제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한데 말입니다.

◆자료상세설명

현재까지 한국보다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은 동구권의 몇몇 국가 뿐이며(헝가리, 체코 등), 많은 고령사회 국가들은 선진국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 중 하나

KDI에서 예측한 잠재 성장률 (%)



**소득 2만 달러는 2010년대 중반에나 가능,
2020년 이후에는 2~3% 성장도 어려워**

KDI는 한국경제가 예전과 같은 7%대의 높은 성장률은 더 이상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2010년대 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3%의 저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한국경제,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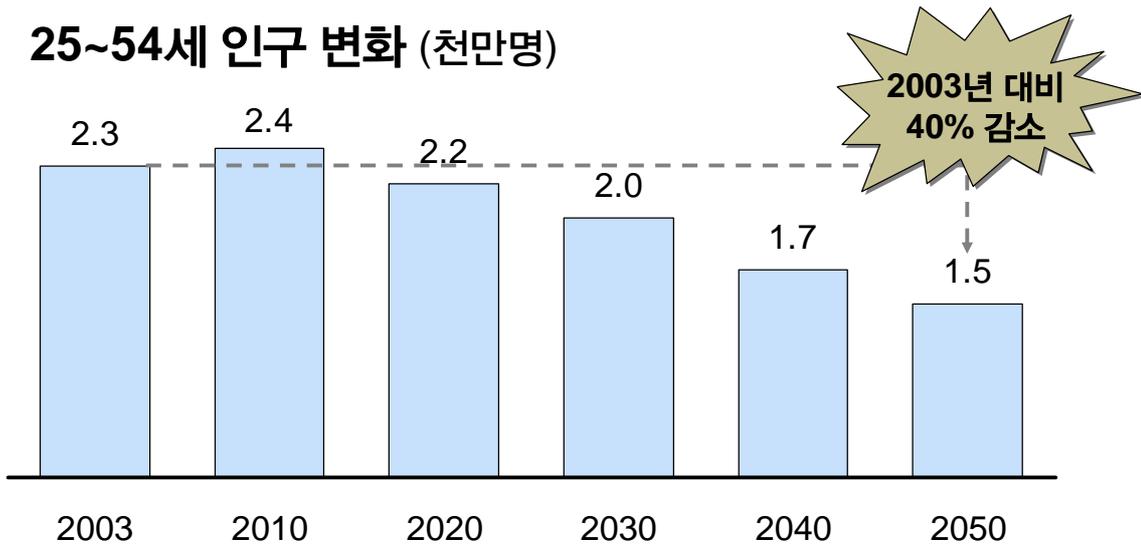
자료의 잠재성장률 범위는 고성장과 저성장일 때의 범위임

KDI는 잠재성장률을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의한 성장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특히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으로 인한 성장은 1990년대의 3.4%에서 2000년대 2.4~2.5%, 2010년대 1.7~1.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고령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결과임

원인 1: 생산인구 감소로 양적 성장 기반 위축

25~54세 인구 변화 (천만명)



**25~54세 노동인구가 2050년에는
2003년 대비 40%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생산인구의 절대적 감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생산인구인 25세에서 54세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3년 대비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성장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며 동시에 생산인구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된다는 뜻입니다.

차세대 강국은 인구 보너스 국가?

중국

- 매년 2,500만 명이 도시 노동시장에 공급

인도

- 영어에 능통한 고학력 인력의 공급이 풍부 (Andhra Pradesh 산업단지 한 곳에만 매년 64,000명의 공대생이 공급)

미국

- 추가 인력 필요 10대 직업을 위한 특별 이민 절차 등 적극적 이민 정책 실행

한국

- 20세 인구가 현재 78만 명에서 2023년 49만 명으로 축소

이에 비해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리잡은 이른바 'BRICs 국가'들은 '인구 보너스'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매년 2500만명의 인력이 도시 노동시장에 공급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은 인력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산업단지 한 곳에만 매년 6만4천명의 공대생이 공급됩니다. 한국 공대생 전체숫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고령화 사회로 빠져들고 있지만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20세 인구가 78만명에서 20년뒤면 49만으로 줄어드는 한국. 이민을 통해 인력을 수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자료상세설명

인구보너스 국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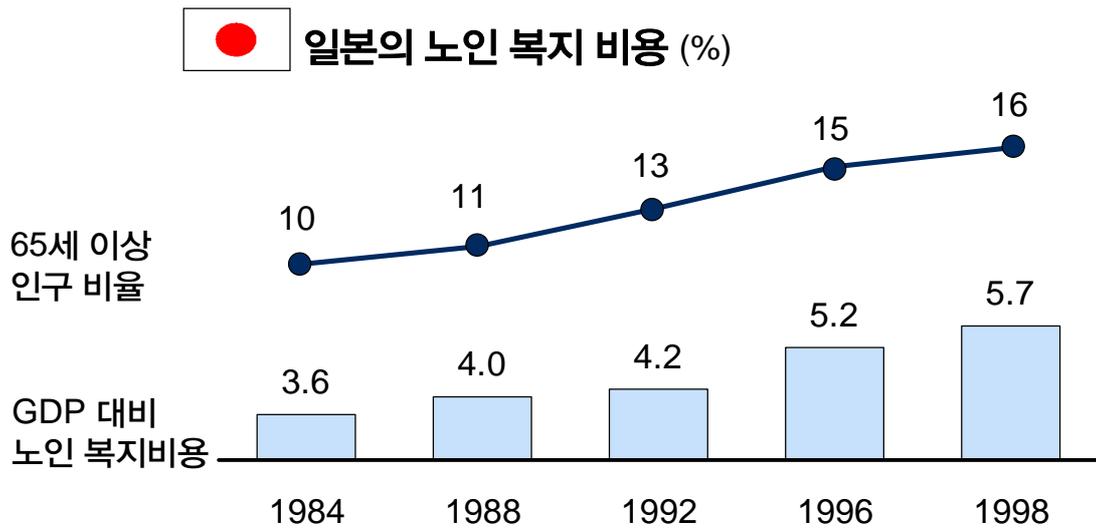
하버드대 경제학자 제프리 윌리엄슨과 데이빗 블룸이 인구구조가 국가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나눈 데에서 기인한 용어임.

1기는 인구 부담기로, 베이비붐으로 인한 양육부담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

2기는 인구 보너스기로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인구가 되어 성장동력으로 작용,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

3기는 인구 고령화기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산인력 감소 및 부양 비용증가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임

원인 2: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화 재정 부담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출 여력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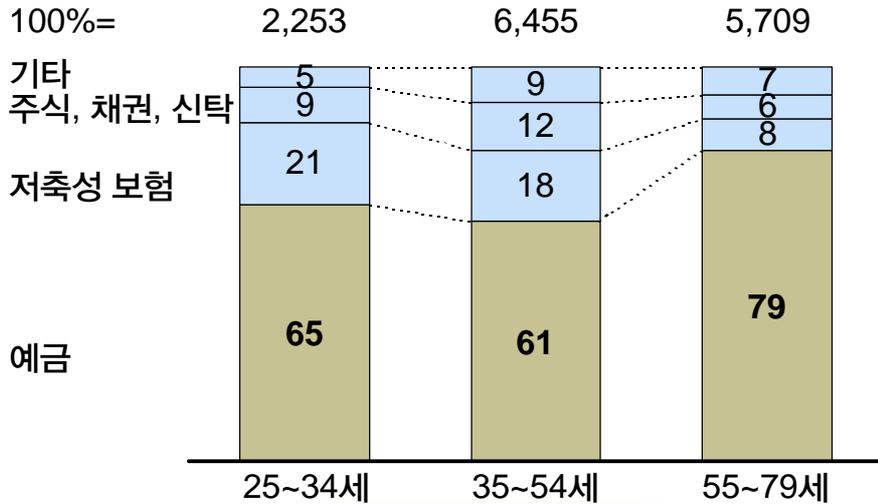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관련 복지비용과 재정부담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볼 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 복지비용이 GDP의 6%에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연금, 의료보험재정의 확충,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및 지출 여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GDP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용은 노인에 대한 보조금 (Old age cash benefits)을 GDP로 나눈 수치임

원인 3: 전반적 고령화로 혁신성향 쇠퇴

개인의 금융자산 분배 1999~2002 (만원, %)



자산운용 보수화로 직접금융시장 위축

뿐만 아닙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혁신성향과 기업가 정신이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혁신적 창업의 주체가 되는 20~30대 젊은 층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인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축적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20~40대보다 예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직접금융시장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일인당 금융자산액이 아니라 가구당 금융자산액으로써, 연령 구분은 각 가정에서 가장 나이 많은 가구원을 가구주로 가정하여 가구주에 따라 나누었음
 기타에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아직 타지 않은 계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인구지진과 2026년 한국,
- 하나가 벌어 하나를 부양
2. 늪어가는 한국, 삶이 고달프다
3. 한국경제와 고령화의 덫
4. 해법은 알고 있다. 실천이 문제다
5. 신 국부창출,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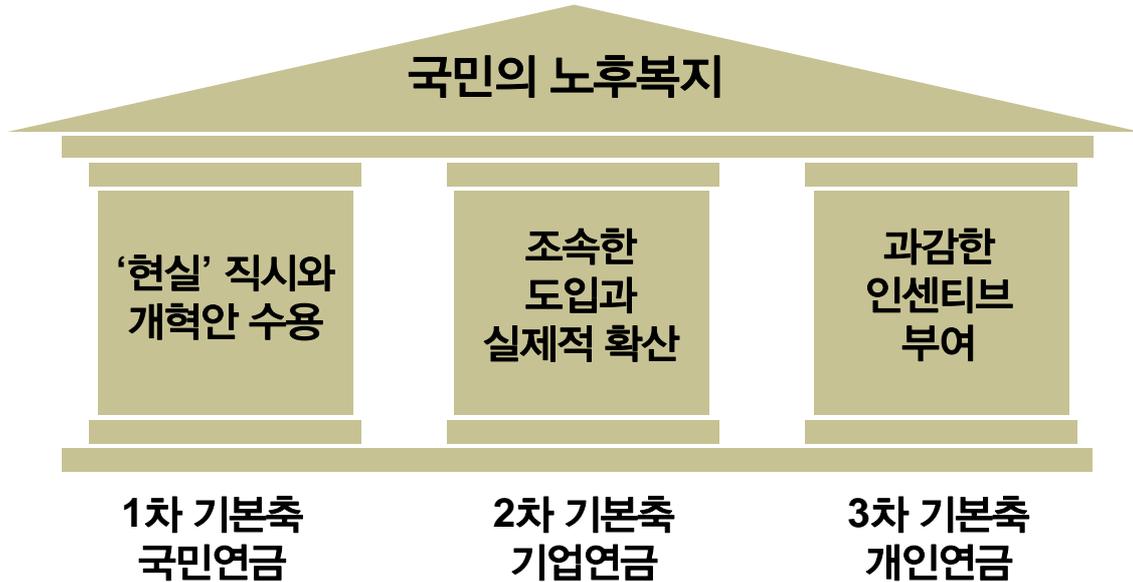
이렇듯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올 고령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1 국민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하고
연금의 3대축을 구축하라
- 2 의료 개혁, 재원을 확보하라
- 3 고령화 산업과 금융을 키워라
- 4 둘 이상 낳을 사회인프라부터 갖춰라
- 5 50대는 청년이다, 일하자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산율 회복과 고령인구의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1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연금 시스템의 3개축을 제대로 세우자



먼저 시급한 과제로 연금개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따름입니다.

어느 하나의 개혁만으로는 수렁에 빠진 한국의 연금 시스템을 구할 수 없기에 향후 몇 년간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3개 연금축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과 2006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메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논의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관련 법제들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상한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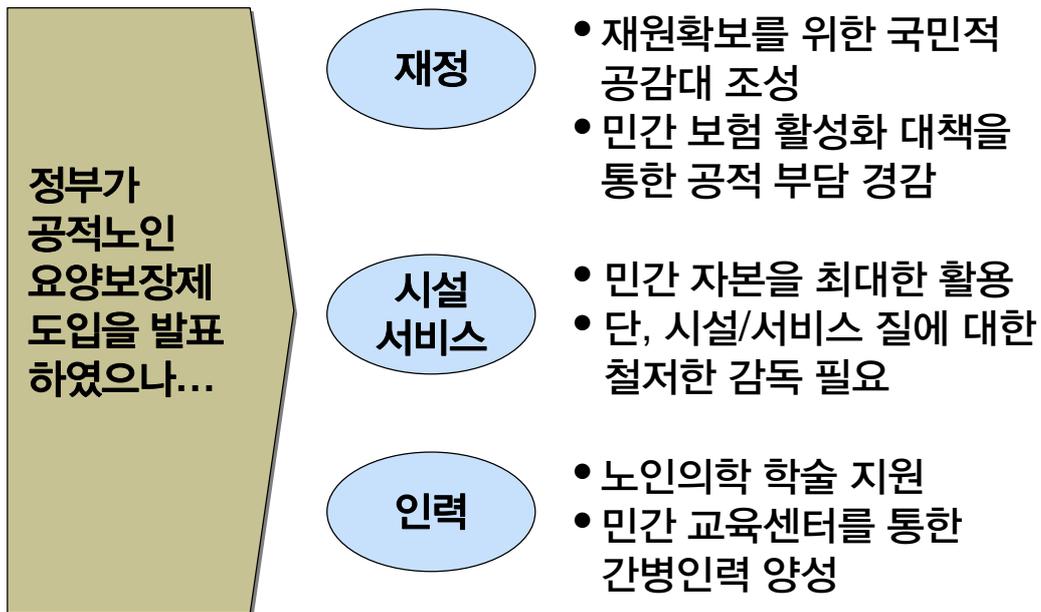
◆ 자료상세설명

국민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 개혁은 불가피, 더 많이 내고 적게 늦게 받는다, 최저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퇴직연금: 일단 도입을 서둘러야 (선도입 후수정 원칙), 이름뿐인 도입이 되지 않도록 DC/DB에 대한 차별적 세제혜택 제공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다변화, 개인연금 상한액 상향조정, 투자 자산 종류 다변화, 퇴직연금과 연계

2 노인 의료제도 개혁: 재원을 확보하라



의료제도의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노인의 장기요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인 공적노인영양보장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새로운 복지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인 만큼 재원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보험사의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정부재원은 물론 민간 자본을 통한 시설, 서비스 및 인력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3 금융기관, LIFE PARTNER로 거듭나라

다양한 기회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역모기지론
- 간병보험
- 통합 연금관리 계정

기회 포착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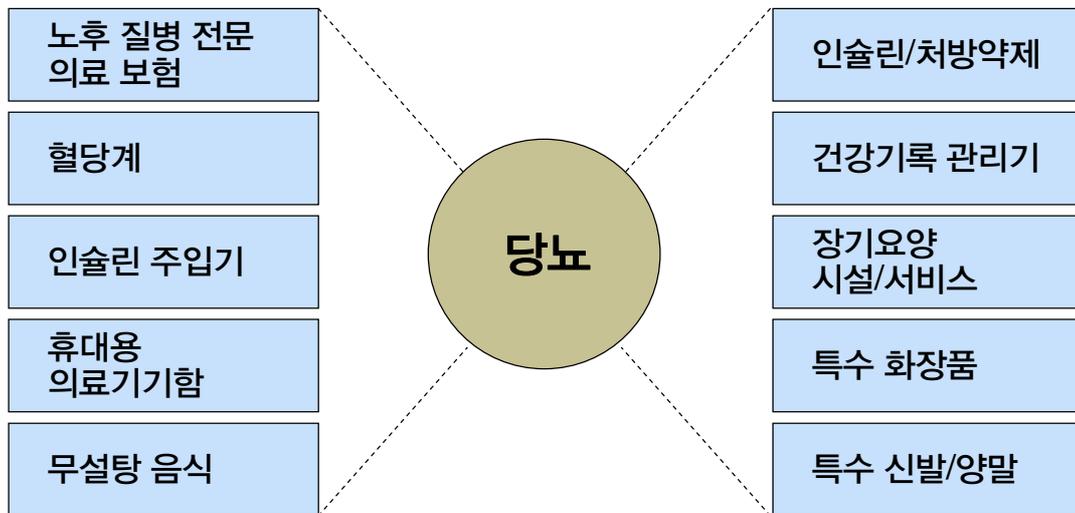
- 고객에게 노후대비 필요성 환기
“당신의 노후도 자녀만큼 중요”
- 고객의 신뢰 확보
“30년 뒤에도 견실한 회사”
- 전문인력 양성
- 세제혜택 등 정부 인센티브

고령화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먼저 금융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와 자산관리 수요는 금융기관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 노하우와 역량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의 기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Life Partner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30년 뒤에도 건재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3 의료 산업, 새로운 기회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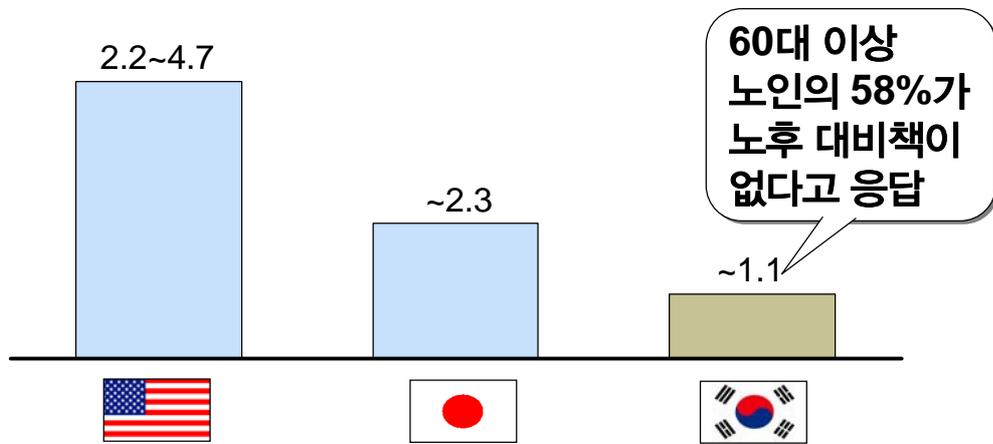


당뇨 질환 하나에서도 다양한 산업기회 발생

선진국의 경우 노인 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각광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노인 질환은 장기요양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커서 예방, 치료, 관리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기회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인 질환 중 하나인 당뇨의 경우 음식, 약제, 계측기로부터 보험, 장기요양 시설/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기회가 발생합니다. 국내의료산업, 시니어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3 한국 노인 산업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65세 이상 노인 가계의 소득 수준 (만 달러)



**신 사업의 도래는 확실
단, 시장 성장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그러나 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시니어산업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소득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사실상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10%에 이릅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니어산업 시장규모 예측에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자료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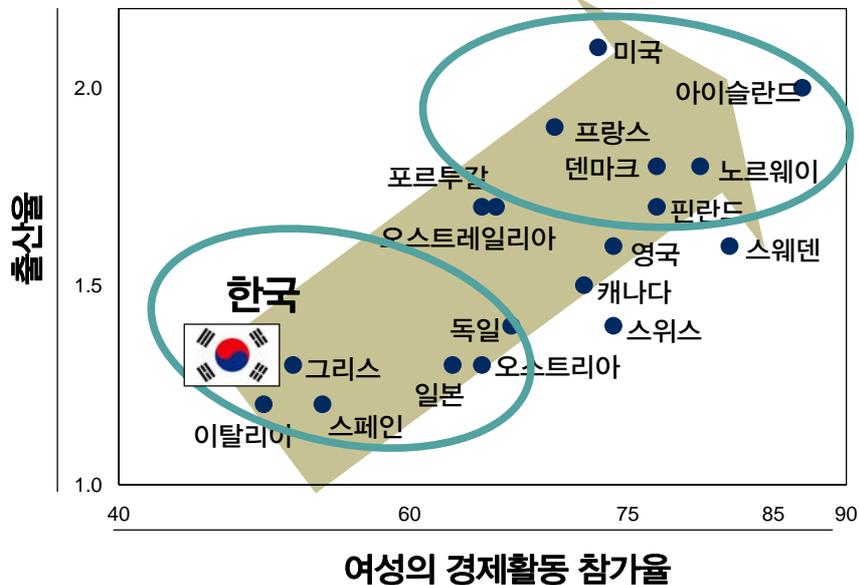
미국: 노인 가계소득 통계가 없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65세 이상 노인 1인의 평균소득과 남자노인, 여자노인의 소득 합산(2인가구로 생각할 경우)을 소득 범위로 잡았음, 2003년 통계

일본: 65세 이상 노인가계 중 노동자 가계와 비노동자 가계의 소득 수준을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가중평균함, 2003년 통계

한국: 노동패널을 통해 가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5세인 668가구의 평균소득임, 2002년 통계

4 출산과 경제활동 알고 보면 같이 간다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001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 그렇지 몰라도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OECD국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대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하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하여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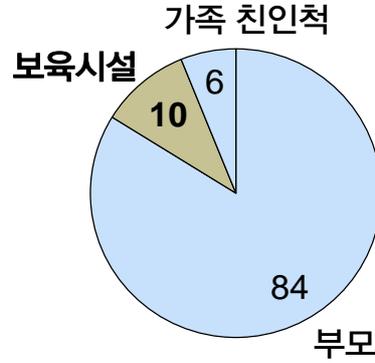
2003년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1.19로써 위의 표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8.9%로 2001년과 비슷한 수준임

4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만들어라

보육시설 이용률 (2003, %)

자녀 양육 어디서? (2002, %)

100% = 총 영유아 3백60만 명



고령화 문제를 푸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출산이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육아휴직, 탄력적 근무제도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은 보육시설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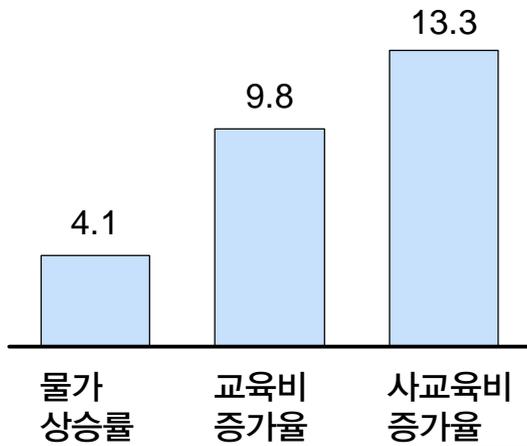
36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 중 보육시설 영유아는 80만 명. 4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급부족도 문제지만 신뢰의 부족, 품질의 부족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은 기본이고 민간기업들도 참여해 산모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보육시설 인증 및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자료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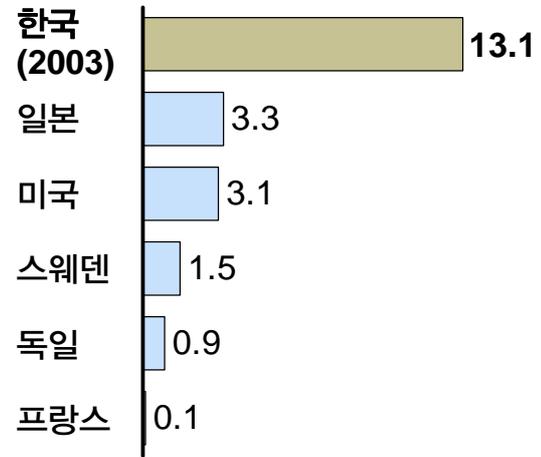
영유아는 0~5세 아동

4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둘째가 생긴다

물가 대비 교육비 증가율
(과거 10년 평균 %)



가계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
(2000, %)



엄청난 육아비용도 출산장벽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입니다. 선진국과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보육시설과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둘 이상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 시대 국가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무이자 최선의 인권정책입니다.

◆ 자료상세설명

OECD 2000 통계 자료에 근거, 교육관련 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공식적인 사교육비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OECD 데이터는 설문조사자료나 추정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5 50대가 일하면 고령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 (2002)

1위 이탈리아

2위 일본

7위 벨기에

15위 헝가리

일하지 않는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 (2002)

1위 벨기에

3위 헝가리

12위 이탈리아

14위 일본

저출산이 미래를 뒤흔들 문제라면 노인실업은 청년실업과 함께 우리의 당면문제입니다.

UN은 45년전인 지난 196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정의를 재검토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은 국가경제에 주는 영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UN 기준을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5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아,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벨기에, 헝가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50대를 활용하면 고령화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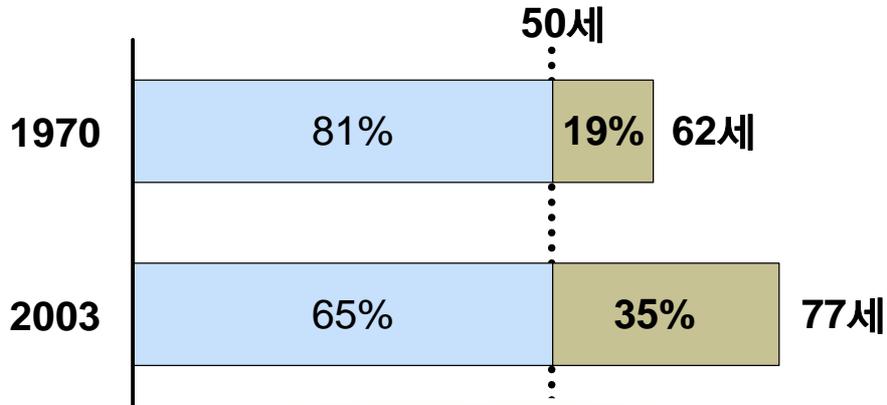
◆ 자료상세설명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비율, 즉 고령화 비율에 따른 OECD국가들의 순위임

일하지 않는 50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은 나라: 50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비율에 따른 OECD국가들의 순위임

5 50대, 이제는 청년이다

50세 이후 인생이 전 생애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생의 1/3이 남아 있다

신체적으로도 지금의 50대와 UN이 고령 사회를 정의하던 1960년의 50대는 차이가 큼니다. 1970년 우리나라 50세의 앞에는 인생의 1/5이 남아 있었으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 지금 50세 앞에는 인생의 1/3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50세는 1970년의 41세와 같습니다. 이제는 50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50대는 청년으로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한창 일할 젊은 나이의 50대의 신체적/지적 능력에 맞는 직무를 제공하여 이들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자료상세설명

2003년 50세가 35%의 인생을 더 살아야 함을 기준으로, 동일 비율을 70년대에 적용하여 41세를 도출함

5 인생 이모작, 재취업 환경을 제공하라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장
큰 전제조건

재취업 후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의 고용 탄력도는 낮을 수 밖에

일한만큼
받는다

직무급제를 통해 기업의 고령인력 고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일 하려는 자세

50대는 능동적으로 즐겁게 일할 주체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환경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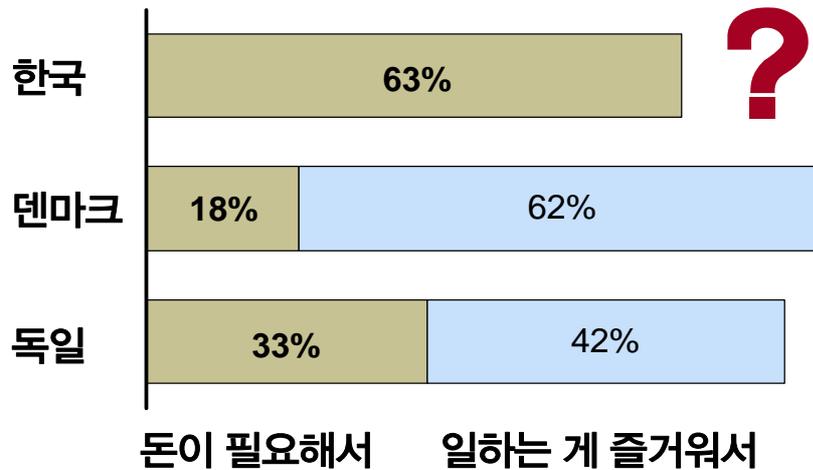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 핵심입니다. 기업이 50대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 줘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호봉급제를 보완할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일한만큼 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연령 때문에 자동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고령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자신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50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열매를 거두고 휴식을 취하는 나이가 아니라, 아직도 능동적으로 즐겁게 일할 주체입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인의 취업희망 이유



생계와 자아 실현,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가면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60% 이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개인적 노후 대비가 탄탄한 덴마크의 경우 60% 이상이 자아실현이나 여가를 위해 일한다고 응답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아실현보다 생계야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5 노인이 노인을 돕는 SENIOR COMPANIONS



건강한 노인
1만 5천명이

쇠약한 노인
6만 1천명을
보살핌

정부 예산 500억원 지원

- 아픈 노인 간병비 매년 2,000억원 절감
- 수입이 필요한 건강한 노인을 지원

노인 부양 비용을 이중으로 절감



미국의 Senior Companions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과 몸이 불편한 노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인 1만 5천명이 쇠약한 노인 6만 1천명을 보살피고 그 대가로 시간급여와 보험 등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2002년 이 프로그램에 우리 돈 500억원을 지원, 아픈 노인 간병비 2,00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동시에 수입이 필요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자료상세설명

Senior Companion은?

미 중앙정부가 지원/운영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Corporation of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s의 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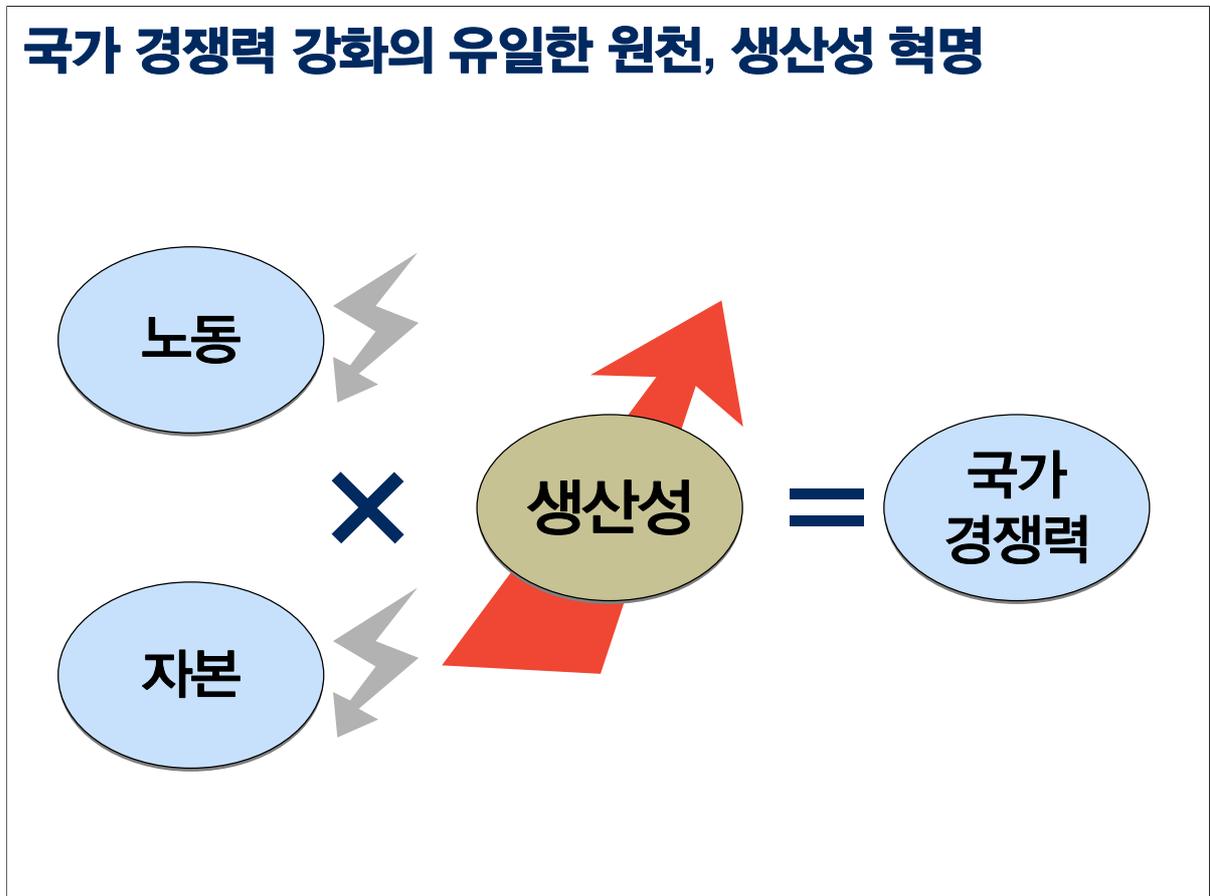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봉사의 주체가 되며 과거 경험/현재 상황 검토 및 전화 인터뷰를 거쳐 봉사가능여부를 판단함.

1인의 봉사주체가 평균 2.7명의 봉사대상을 지원하며, 주 20시간 근무함. 세금면제의 시급 2.65 달러와 왕복 교통비, 연간 건강검진비, 식사비 및 재해보험이 지급됨. 주 봉사활동은 장보기, 공과금 납부, 병원까지 교통편 제공, 위급상황시 병원과 가족에 연락 등의 일상 생활 보조임

2000년에 시행한 봉사활동 제공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노인의 봉사활동의 질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3%에 이르렀음.

1. 인구지진과 2026년 한국,
- 하나가 벌어 하나를 부양
2. 늪어가는 한국, 삶이 고달프다
3. 한국경제와 고령화의 덫
4. 해법은 알고 있다. 실천이 문제다
5. 신 국부창출,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원천, 생산성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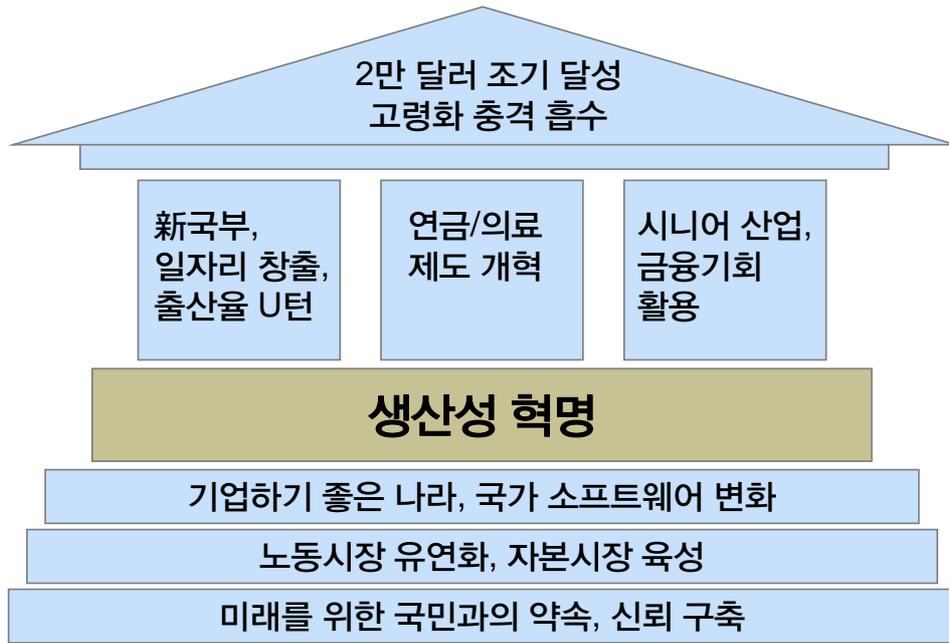
그러나 이 모든 대책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재원을 과연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결론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국부창출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입니다.

노동투입량은 생산인력 감소로 줄어듭니다. 자본은 고령화로 보수화 되어 갑니다. 이제는 요소투입형 성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생산성 주도형 성장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술혁명, 소프트 혁명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 확보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같은 국부가 창출되어야 출산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제공하며 노인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화 충격, 활로는 있다



고령화 충격, 문제의 크기는 대단히 큼니다. 그러나 활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스럽긴 해도 미래한국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 신뢰를 얻고 지켜질 수 있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장기 자본시장 육성,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가 만들어 진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기술혁명, 생산성 혁명으로 새롭게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출산율이 U턴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제도의 성공적 개혁, 신사업기회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 고령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전있는 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을 위한 캠페인

“50대 이제는 청년이다”

“셋만 낳아 잘 키우자”

“노후대비는 장기투자자”

“생산성 혁명으로 선진국 도약”

미래한국을 위해 SBS와 맥킨지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50대 이제는 청년이다”

“셋만 낳아 잘 키우자”

“노후대비는 장기투자자”

“생산성 혁명으로 선진국 도약하자”

이상 네가지입니다.

고령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 지금 준비합시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히 인구의 연령구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은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

“고령화는 연령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은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앨런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고령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충격,
활모는 없는가?**
50대, 이제는 청년이다!
생산성 혁명이 살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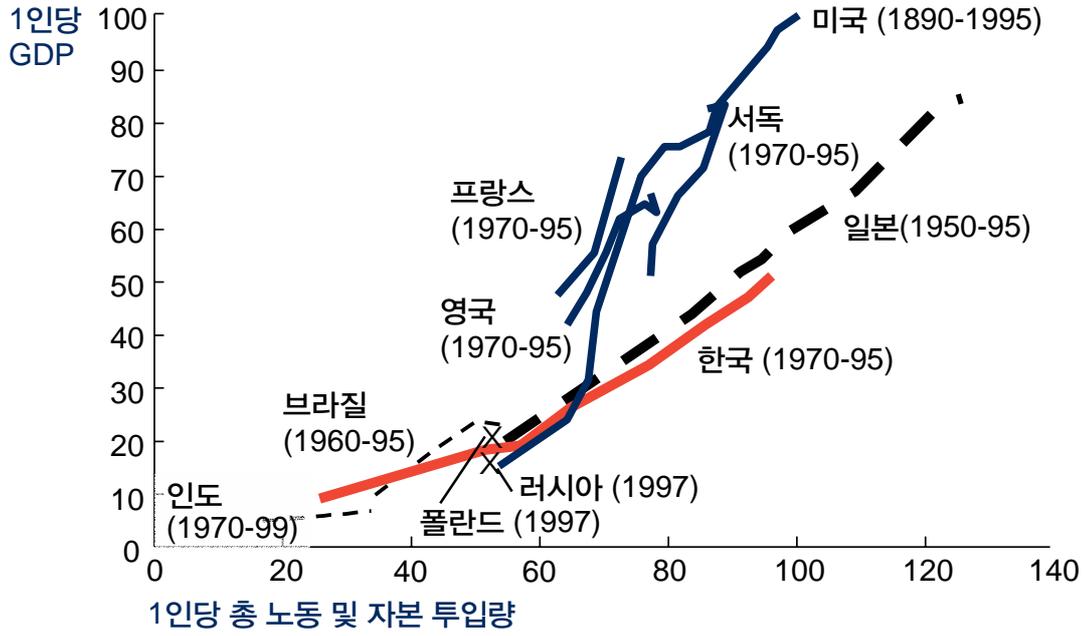


한국의 고령화 충격, 왜 생산성 주도 성장이 필요한가

Korea's Aging and the Productivity Impe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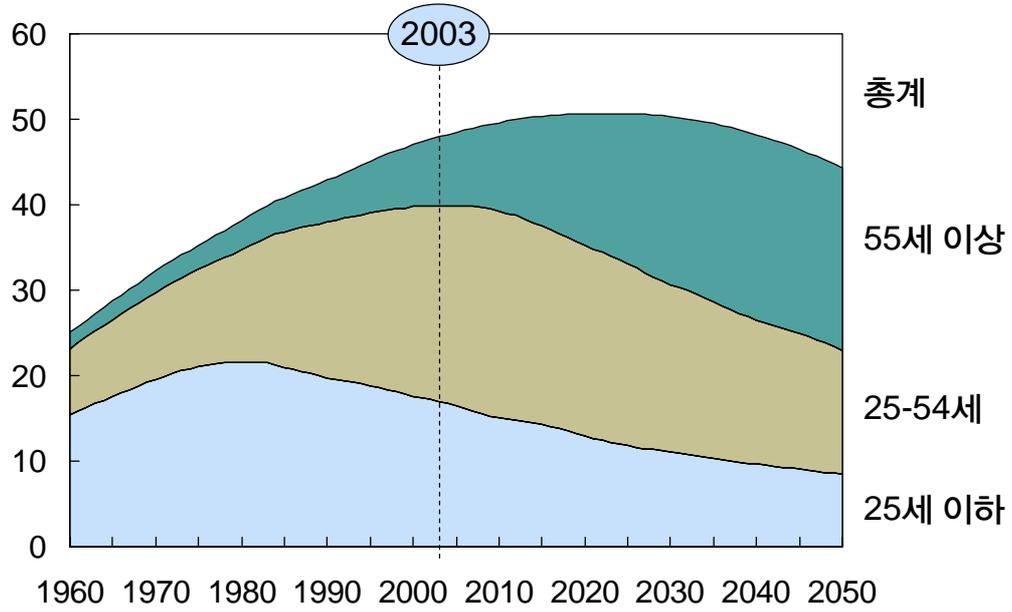
경제 발전 경로

1995년 미국 대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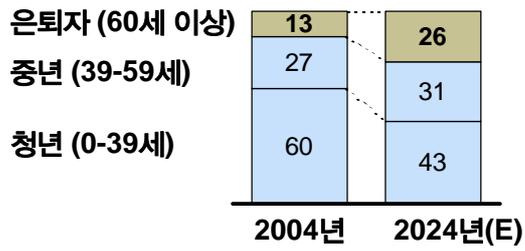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

연령 그룹별 한국 인구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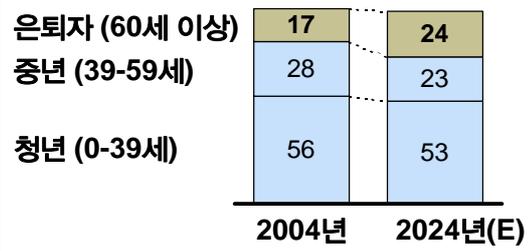


주요 경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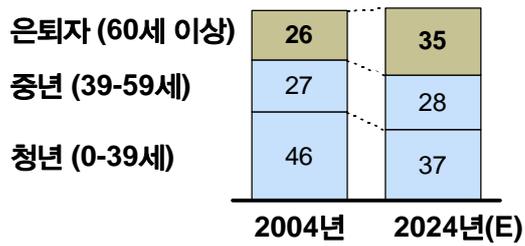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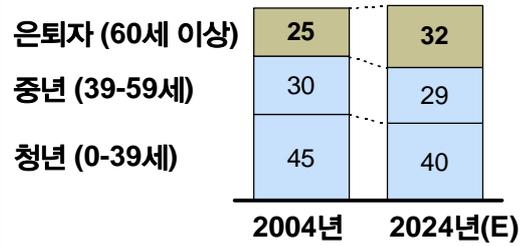
미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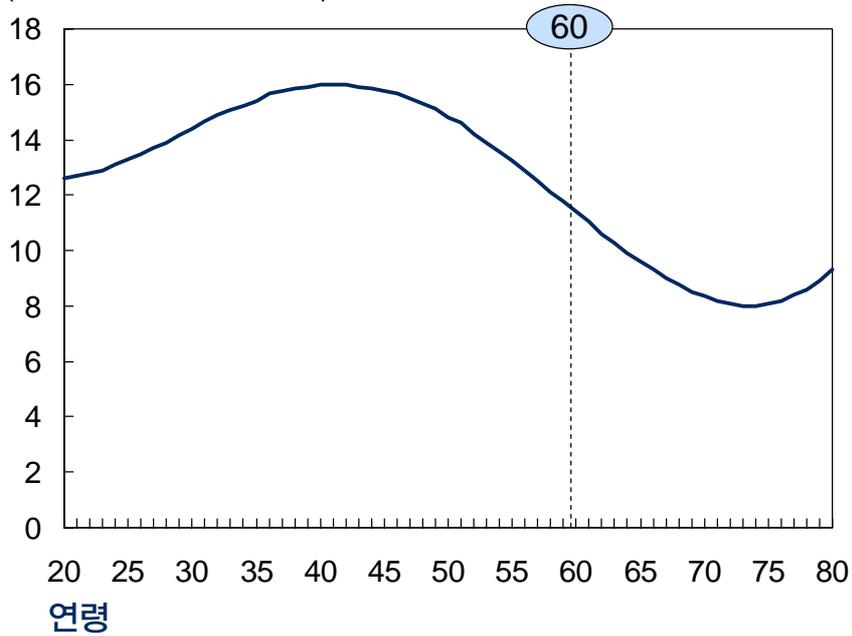


독일



통상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나타난 저축 동향

통상적인 가계 저축률
(가처분 소득 대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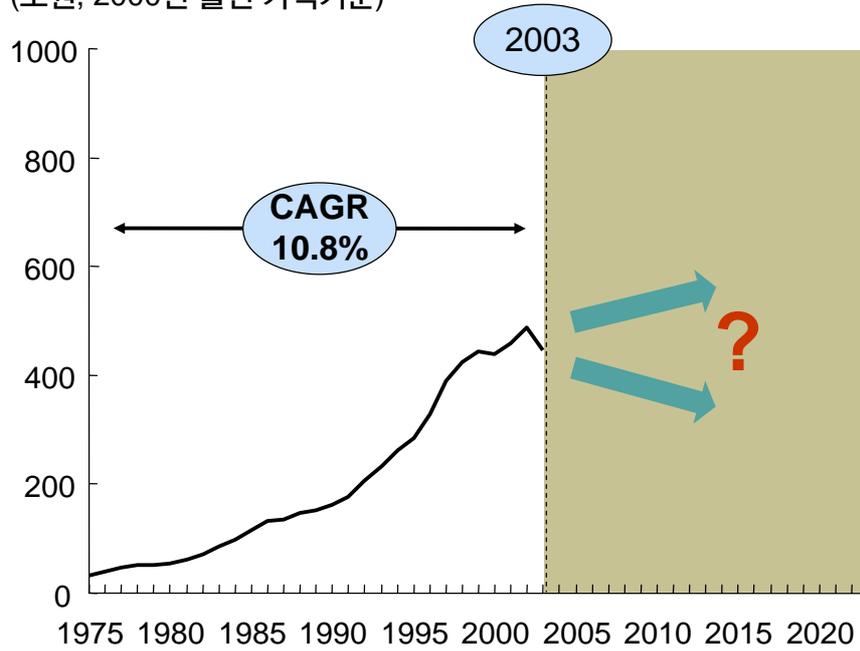
Note: 독일의 1976-1980 cohort 를 사례로 이용함

자료: Schnabel 1999, Börsch-Supan (2002), 팀분석

한국의 금융자산 증가 추세

일 차 적

한국가계의 총 순 금융자산
(조원, 2000년 불변 가격기준)





한국의 고령화 충격, 생산성 혁명이 돌파구다

Korea's Aging and the Productivity Imperative

강 평

(9.15, SBS 미래한국리포트, 하이야트호텔)

이헌재 경제부총리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프로그램을 제작·기획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받는 도전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로 대표되는
BRICs 국가들의 부상입니다.

현재 G6 의 15%에 불과한 BRICs 의 경제규모는
2025 년이면 G6 의 절반규모를,

그리고 2040 년 경이면 G6 국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부적 도전요인은
고령사회의 도래입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보다 적은 경제활동 인구로
보다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므로,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 활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BRICs의 부상이나

고령화 추이를 감안할 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5년밖에 없습니다.

15년 안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서

선진경제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도전**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 지속추진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대에 대비하여

세원을 넓혀 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지출과 교육비 지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SOC 투자 등 경제적 지출은 연기금을 활용하고,

국내·외의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보완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고령자 인재은행(43 개소) 등을 통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고령자(50 세이상) 신규고용 1 인당 월 30 만원을 6 개월간 지원(500 인 이하의 제조업은 12 개월 지원) 등

금년 하반기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전직지원 강화, 정년연장, 연령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SBS 의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그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SBS 의 미래 한국리पोर्ट를 통하여
고령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질의내용>

1. 고령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2.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3. 고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심각성은 무엇이며, 향후 출산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5.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6. 고령사회 문제를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고령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고령화는 한마디로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우리사회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구의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 WHO 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는 사회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고령화라는 “인구 지진사태”가 한국사회를 엄습해 오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향후 한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악화** 등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점이었던 역동성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 경제전문가들은 '**고령화의 덫**'의 의미와 심각성을 깨닫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KDI 는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저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4~5%대에서 2030년에는 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일반적으로 **UN 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 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
-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1970 년 10.0%, 1980 년 11.7%, 1990 년 12.4%, 2000 년 13.7%로 증가 추세.
- **2002 년도 합계출산율이 1.17 로 세계 최저를 기록**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뉴질랜드 1.90)

- 2000 년에 고령화 사회(7.2%)에서 2019 년에 고령사회(14.4%), 2026 년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 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7 년 소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24 년)보다 5 년이 빠름
 - ※ 농어촌의 경우 65 세 이상 인구비율이 15.8%('02 년)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상태임.

2.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를 경험 했거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에 기인합니다.
-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식품영양 및 위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 2001 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 세(남자 72.8 세, 여자 80.0 세)로 '81 년 66.2 세, '91 년 71.7 세 보다 각각 10.4 세, 4.8 세 증가
 - ※ OECD 30 개국의 평균수명 : 남자 74.4 세, 여자 80.4 세

□ 반면에 **출산율의 저하**가 또한 중요한 한 요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가치관의 변화, 혼인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및 자녀 양육의 큰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가치관의 변화

- 미혼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조사결과(2003), **미혼남녀의 29.1%**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41.5%로 남성 19.9%보다 부정적 혼인관을 갖고 있음.

- **기혼부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2003),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급격히 감소**됨.

※ 1991년 90.3% → 1997년 73.7% → **2000년 58.1%**

-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혼인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변화 조사결과(2003), **미혼남녀의 34.1%**가 개인책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43.5%)**이 남성(27.0%)보다 혼인에 대한

개인책임을 낮게 생각하고 있음.

○ **초혼연령의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 혼인 연령층인 20~30 대 인구의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 및 출산 기피, 독신 선호 등 혼인에 대한 태도변화 등으로 **혼인감소 추세 지속화.**

※ 혼인건수는 '92년 420천건 → '02년 307천건 (113천건, 27% 감소)

-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92년 25세에서 '02년 27세로 2년 상승**하여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도 '92년 27.4세에서 '02년 29.7세로 2.3년 상승

○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으로 나타나며,
-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기피현상을 확산**시키는 악순환 초래

※ **전체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32만원**으로 1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234만원의 56.6%를 차지

○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욕구 증대
- '가정에만 전념', '혼인전까지만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90 년 각각 21.1%, 20.2%에서 2002 년 8.1%, 5.2%로 대폭 감소하고,
-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90 년 13.7%에서 2002 년 35.4%로 꾸준히 증가

3. 고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심각성은 무엇이며, 출산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수준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효과가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이미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가임(可妊)여성 1 명당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인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9 명**으로 떨어져 '역(逆)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 가속화
- 1989 년 일본은 출산율이 1.57 명으로 떨어지면서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경고등을 울리자 '**1.57 쇼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 이어 2001년에는 출산율이 1.33 명으로 낮아졌음.
- 일본은 '0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1 억 2700 만명(현재) ⇒ 1 억명(2050년)⇒6000 만명(2100년))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방안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저출산의 문제는 개개인의 가치관과 연관된 문제로 그 대처는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나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없도록 양성평등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미혼모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사회가 함께 양육하고, 어려운 가운데 탄생한 미숙아들도 우리사회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나눔과 섬김”이 뿌리내리는 좀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 고령사회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주요한 원인은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에 대한 불안감과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합니다.
-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가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의 개선이 늦을수록 후세대의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시
투명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제도내실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행제도 유지시, 적립기금은 2047 년에 소진

- 보험료율이 2050 년에는 30.0%, 2070 년에는 39.1%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5.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 65 세이상 노인인구의 약 8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 15%(65 만명)의 노인이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노인의 의료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의료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의 의료수요에 대처하여,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양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시책의 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 등으로 **장기간의 재활·간병 및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2007년 목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입원이 감소하는 등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 **준비된 노후는 아름답습니다.** 노인 스스로가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바람직한 『노년생활양식』의 정립을 통해 건강한 노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정과 사회의 부담 증가가 최대한 예방되도록 하는 시책도 필요합니다.

※ 전체의료비중 노인의료비 비중

- 2003년 노인인구가 8.7%이나 노인의료비 구성비는 21.3%임.

- 전체의료비 '90 년 2 조 2198 억→'03 년 20 조 5336 억원(약 9.3 배 증가)
- 노인의료비 '90 년 2391 억 → '03 년 4 조 3723 억원(약 18 배 증가)

6. 고령사회 문제를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복일 수 있으나 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WHO 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는
사회혁명”이라고 정의한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가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인구의
보너스(bonus)” 단계에서, 가까운 장래에 걸림돌이 되는 “인구의 오퍼스(onus,
부담)”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축적 고령화”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 정책의 효과가 길게는 수 십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례로 **출산안정화** 시책은 적어도 **20-30 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시스템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SBS 조찬토론회 강평 말씀자료

- 저출산·고령화대비 관련 정책구상 -

1. 프롤로그(인사말)

□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전문가 여러분의 열띤 토론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 여러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주제로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SBS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지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서둘러야 합니다. 결코 뒤로 미룰수 없습니다.

- 참여정부의 정책중 『저출산·고령화』의 의제를 최상위 개념으로 놓고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이미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고령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복일 수 있으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WHO 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는 사회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는 있는 화두입니다.
- 전문가들은 고령화라는 ‘인구 지진(地震)사태’가 한국사회를 엄습해 오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가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인구의 보너스” 단계에서, 가까운 장래에 걸림돌이 되는 “인구의 오톨스(onus, 부담)” 단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은 이미 2000 년에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

- **고령화사회**(2000)⇒**고령사회**(14%, 2019)⇒**초고령사회**(20%, 2026)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9 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됨
- **가임(可妊)여성 1 명당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인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9 명으로 떨어져 '역(逆)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 가속화**
 - 1989 년 일본은 출산율이 1.57 명으로 떨어지면서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경고등을 울리자 '**1.57 쇼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 이어 2001 년에는 출산율이 1.33 명으로 낮아졌음.
 - 일본은 '07 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 ※ 1 억 2700 만명(현재) ⇒ 1 억명(2050 년) ⇒ 6000 만명(2100 년)

3. 저출산·고령화의 의미와 문제점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각종 복지시스템의 작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일하는 청장년층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비율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악화** 등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점이었던 역동성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 경제전문가들은 '**고령화의 덫**'의 의미와 심각성을 깨닫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KDI** 는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저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4~5%대에서 2030년에는 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
- 노인대국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린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4. 정부(보건복지부)의 정책구상

□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저출산·고령화의 의제를 최상위 개념에 놓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령화 사회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04 년 1 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로드맵)」수립(4 대분야 20 개 과제)
- '04 년 2 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

□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주거·의료, 세제·금융 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사회기본법』등 법령정비와 제도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직결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시책과 함께 결혼장려, 이혼예방, 건전 가정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건강한 차세대를 낳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적인 주요 시책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위한 사회적 지원
-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등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 인구자질향상정책 추진 등

5. 맺는 말

□ 앞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의제를 최우선순위로 삼아 범정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

-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언론과 학계 및 연구기관도 정부의 정책추진이 바른 방향으로 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실천전략

비 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	----------------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고령친화적 재정·산업정책
----------------	---

정책 분야	인구·가족 정 책	고용·인력 정 책	보건·복지 정 책	재정·금융 정 책
------------------	----------------------	----------------------	----------------------	----------------------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출산안정화	제도 및 고용 관행 개선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재정수지균형, 산업구조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관 재정립 ◦출산·양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직무체계 개선 ◦정년·연령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층연금체계 도입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실버산업육성
	가정과 직장의	고용기회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금융·자본시장

	양립	능력개발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육아의 사회적 부담강화 ◦보육서비스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고용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생활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금의 시장 안정기능강화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인구자질 향상	및 건강증진	교육, 여가·문화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출생성비 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주거환경 개선 	

【참고자료】

□ 출생아수:739 천명('92)→495 천명('02), 합계출산율:1.78('92)→1.19('0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단위 : 천명, 명)

구 분	72	82	83	92	93	95	97	00	01	02	03
출생아수	955	859	778	739	724	721	678	637	557	455	494
합계출산율	4.14	2.42	2.08	1.78	1.67	1.65	1.54	1.47	1.30	1.17	1.19

* 통계청

* 2002 년 :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뉴질랜드 1.90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 농어촌의 경우 65 세이상 인구비율이 15.8%(’02 년)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 **현 출산수준(1.17)이 지속될 경우 2017 년 4,925 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 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

<인구변동 추이 : 출산율 1.17 전제>

구 분	1970	1980	1992	2002	2017	2030	2050	2100
총인구	3,224	3,812	4,375	4,764	4,925	4,822	4,046	1,621
0 ~ 14 세	1,371	1,295	1,079	979	625	516	324	120
(비율)	(42.5)	(34.0)	(25.6)	(20.6)	(12.7)	(10.7)	(8.0)	(7.4)
15 ~ 64 세	1,754	2,372	2,970	3,407	3,630	3,154	2,201	772
(비율)	(54.4)	(62.2)	(69.3)	(71.5)	(73.7)	(65.4)	(54.4)	(47.6)
65 세 이상	99	146	220	377	670	1,152	1,521	729
(비율)	(3.1)	(3.8)	(5.1)	(7.9)	(13.6)	(23.9)	(37.6)	(45.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및 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참고자료】선진국들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 사례

□ 고령사회의 선진국들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책은 크게 4 가지임.

- 출산장려, 노인고용의 확대, 노인건강보장 강화 및 연금제도의 개선임

□ 출산장려책

- 프랑스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녀를 낳으면 출산수당과 모성수당을, 2 명이상의 자녀를 키우면 16 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주택수당도 지급. 결과적으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2001 년 기준 1.89 명) 유지
- 일본 : 94 년부터 도시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 'Engel Plan'으로 출산독려.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호시간 연장, 유치원 서비스 확충 등 양육 환경 및 그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건 노력 추진
- 싱가포르 : 87 년 출산억제 정책을 폐기. '능력이 되면 세 자녀 이상을 갖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미혼 남녀의 결혼을 권장하는 등 각종 출산장려책 추진(출산율 1.87 명)

□ 노인의 고용확대

- 미국 : 노인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966 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86 년부터는 정년제도를 아예 폐지함.
- 일본 : 91 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으로 60 세 정년제를 확보. 현재는 65 세 정년제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호주 : 기업이 노인을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

□ 노인요양보장정책

- 독일 : 1995 년 「수발보험제도」 도입, 간병수발서비스 제공
- 일본 : 2000 년 「개호보험제도」 도입, 40 세 이상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미국 : 65 세 이상 노인에게 「메디케어」제도를 통해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 연금 제도 개선

- 스웨덴 : 98 년부터 연금 지급시기를 65 세에서 67 세로 상향 조정. 즉, 65 세에 은퇴할 수도 있지만 일할 능력이 있다면 2 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67 세까지 일하다 은퇴하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

- 영국 : 88 년 연금재정난으로 기초연금 액수를 하향조정. 65 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연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실시



CONFIDENTIAL

Korea's Aging and the Productivity Imperative

Diana Farr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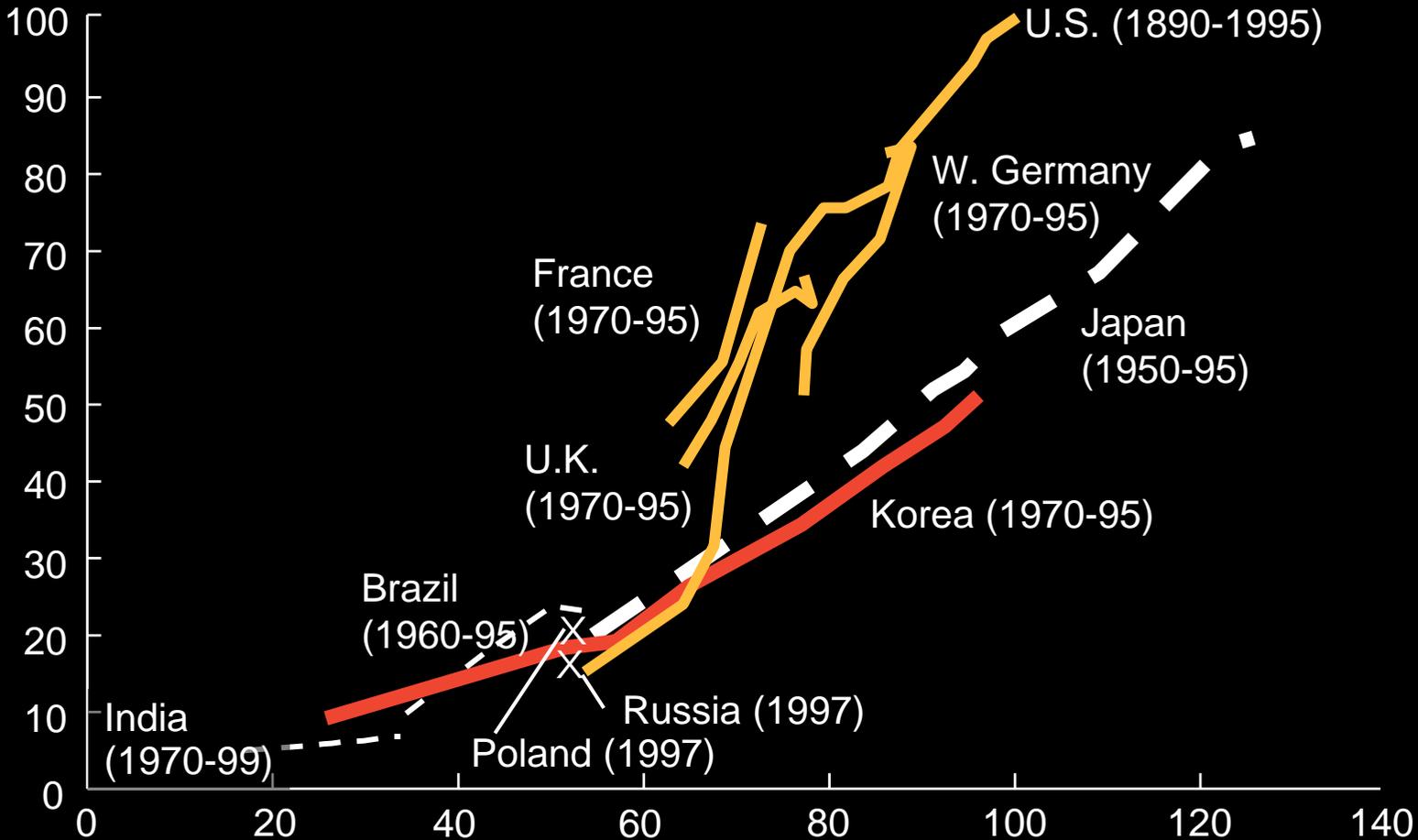
September 15, 2004

This report is solely for the use of client personnel.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s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McKinsey & Company. This material was used by McKinsey & Company during an oral presentation; it is not a complete record of the discussion.

ECONOMIC DEVELOPMENT PATHS

Percent U.S. 1995 level

GDP per capita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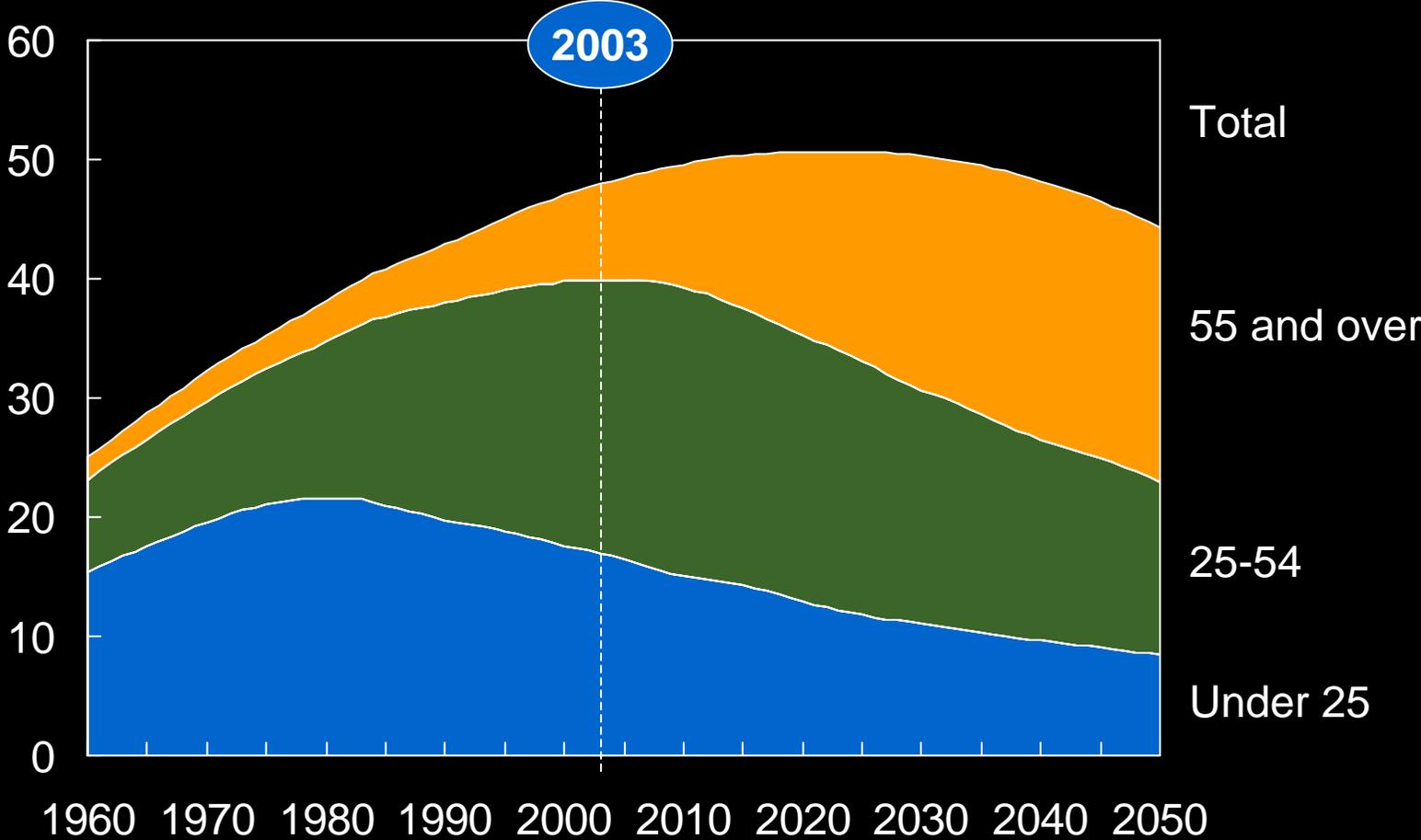


Total labor and capital inputs per capita

KOREA'S AGING POPULATION

Korean population by ag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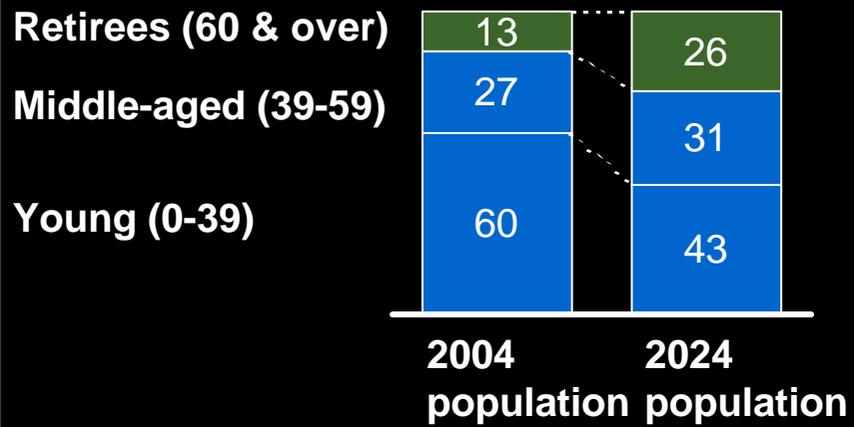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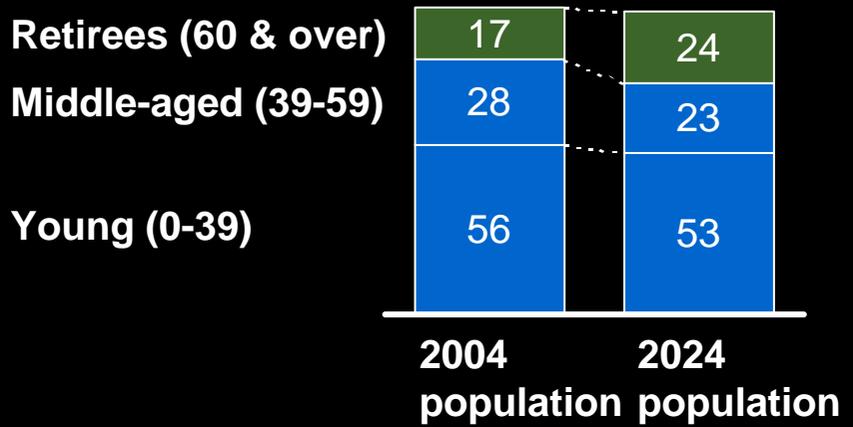
Source: KNSO; McKinsey Household Financial Wealth Accumulation Model

AGING ACROSS THE DEVELOP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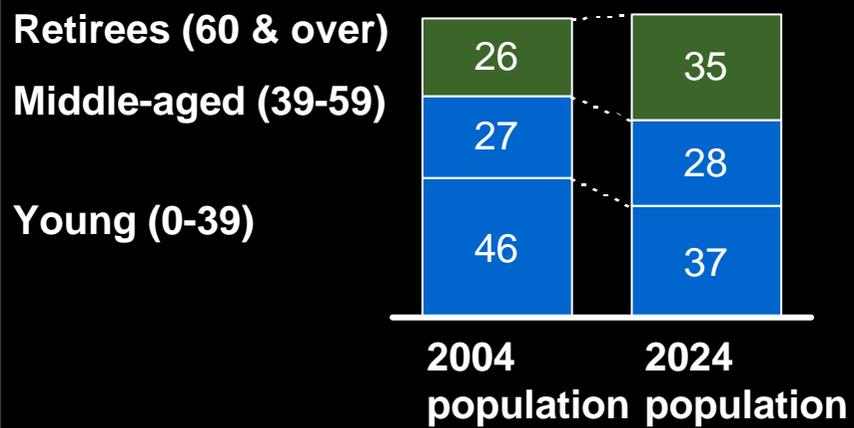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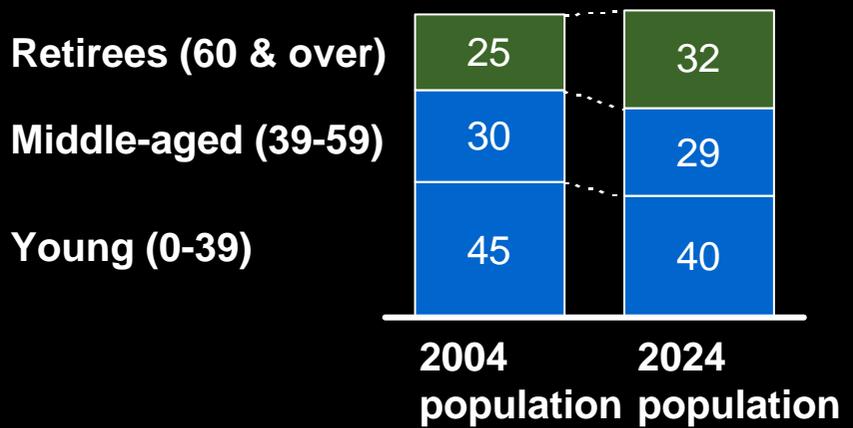
U.S.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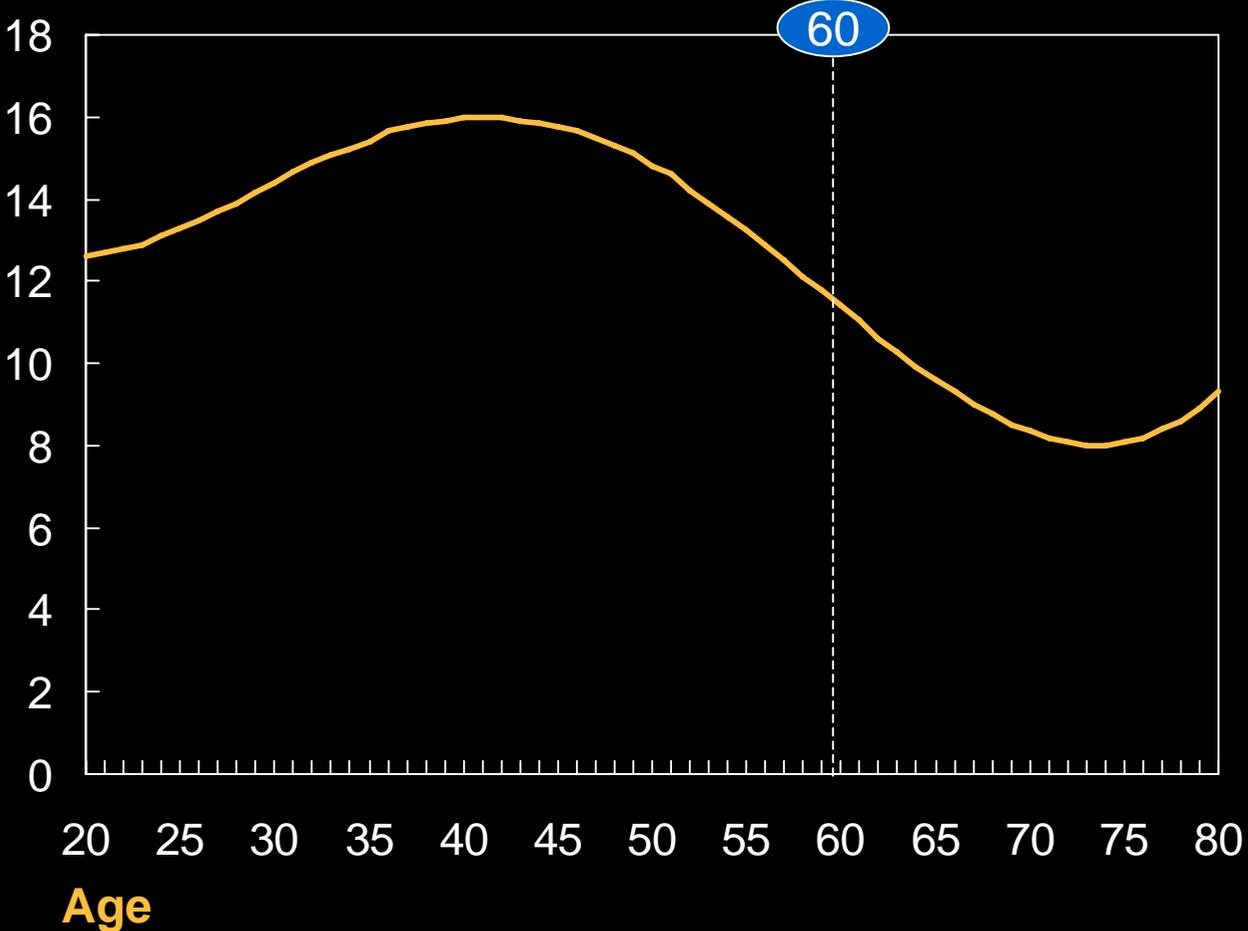


Germany



SAVINGS BEHAVIOR OVER THE TYPICAL LIFE-CYCLE

Typical household saving rate
Percent of disposable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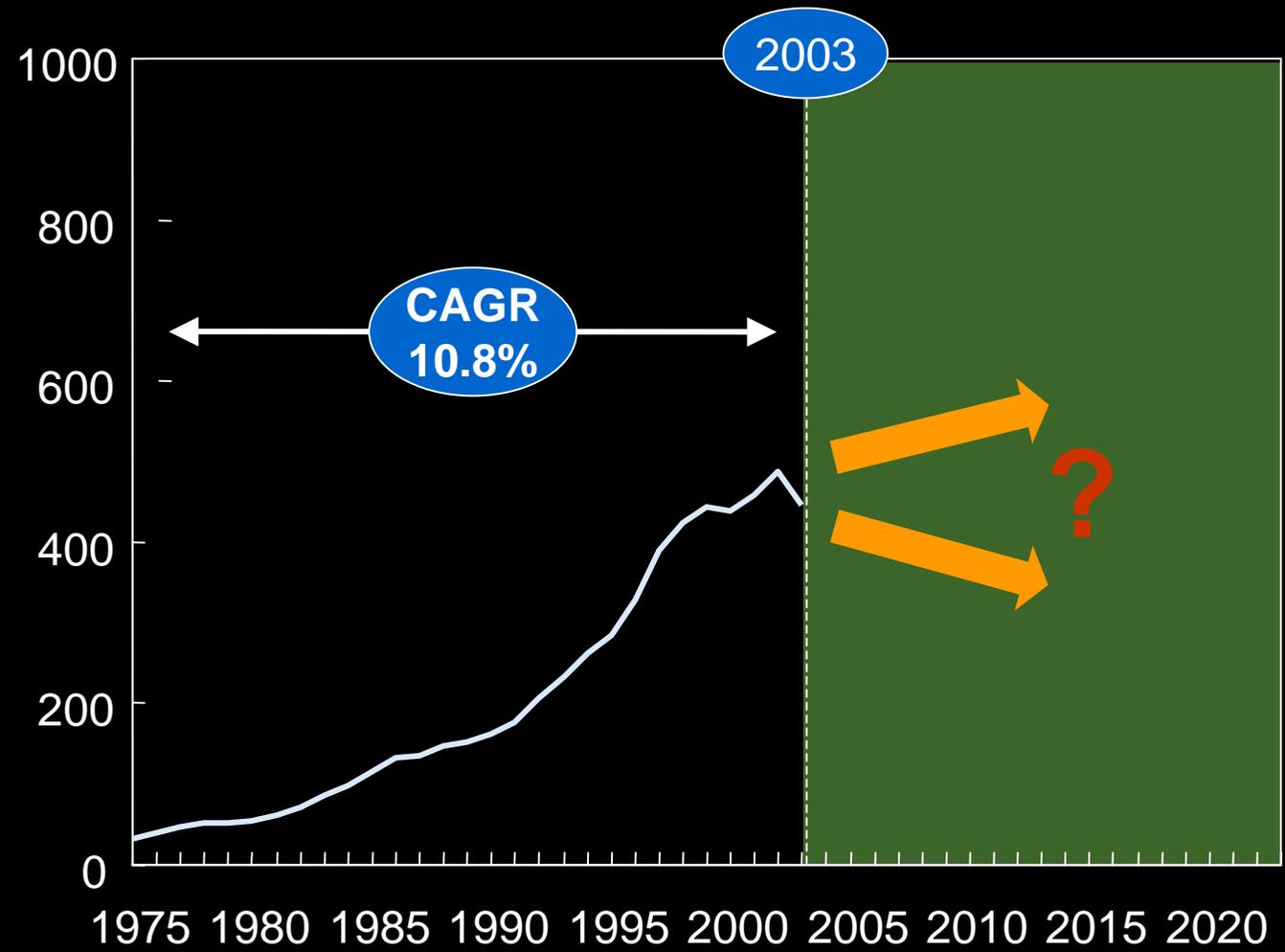


Note: Using German 1976-1980 cohort as an example.
Source: Schnabel 1999, Börsch-Supan (2002), Team analysis

KOREA'S FINANCIAL ASSET EVOLUTION

PRELIMINARY

Total net financial assets (NFA) of Korean households
Trillion Won, constant 2000



Source: KNSO; Team analysis; McKinsey Wealth Accumulation Model

THE PRODUCTIVITY IMPERATIVE

- **Complete financial reforms to ensure more efficient capital allocation across sectors**
- **Continue to implement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and enhance competition to create the right incentive for companies to focus on increasing productivity**
- **Unleash service-sector productivity growth by removing the sector-level regulations like**
 - **Zoning laws and excessive regulatory barriers limiting the growth of more productive retail formats**
 - **House price ceilings and zoning laws limiting growth of the private housing sector development**
 - **Product and pricing restrictions in banking and telecommunications limiting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growth**



CONFIDENTIAL

Korea's Aging and the Productivity Imperative

Diana Farrell

September 15, 2004

This report is solely for the use of client personnel.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s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McKinsey & Company. This material was used by McKinsey & Company during an oral presentation; it is not a complete record of the discussion.